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이혜원 Lee, Hyewon
방재성 Bang, Jaesung

(a u r i

주요 내용

임무화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시점,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필요

- 2019년 12월 19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약 2년 경과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질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 도모 필요
- 특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 별 구성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태조사 필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도 현황 파악을 통한 주요 쟁점 도출

-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와 법령 및 기관별 운영규정 등 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구성, 기능 등 관련 주요 쟁점 도출
- 일부기관에서 타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일회성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전담자 없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심의개최를 하는 경우 발생
- 일부 모호한 조문 내용의 자의적 해석으로 기관별 심의위원 구성에 차이가 발생
- 법령 상 부재한 심의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 기관별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각각 운영
- 건축기획 단계 민간전문가, 기술자문위원회 등 유관기능과의 중복 인식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 제시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전문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제시
- 단기과제로 기관별 운영규정 개정 유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마련, 모호한 법령 개정 추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계자 대상 교육 시행 검토 등 제시
-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반 마련,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능 역할 정립 방안 등 제시

차 례 CONTENTS

<u>I</u>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u>II</u>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1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u>III</u>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53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82
	4. 소결	100

<u>IV</u>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111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쟁점	1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114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0
	참고문헌	121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21.6월말 기준)	2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표 2-1] 독립(별도) 운영 중인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21.6월말 기준)	12
[표 2-2] 지자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16
[표 2-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22.5월말 기준)	20
[표 2-4] 조사내용	24
[표 2-5] 지자체 조사대상	25
[표 2-6]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조사대상	26
[표 2-7] 심층인터뷰 추진 일정	27
[표 2-8] 중앙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 대행 현황	29
[표 2-9]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적인원 및 회의 구성인원 비교(단위:명)	34
[표 2-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내부직원 비율 관련 개정령안	35
[표 2-1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출 관련 개정령안	38
[표 2-12] 한국수자원공사 건축사업 추진절차 중 설계발주 전 심의 등 절차	45
[표 3-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관련 개정령안	55
[표 3-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비교	57
[표 3-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교	58
[표 3-4]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1
[표 3-5] 광역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구성과 내용	62
[표 3-6] 서울, 부산, 충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과 내용	63
[표 3-7] 기초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규정)의 구성과 내용	64
[표 3-8]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	66
[표 3-9]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68
[표 3-10]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 및 비율, 임기, 선출방식	69
[표 3-1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72
[표 3-1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방식	73
[표 3-13]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75

[표 3-14]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등 관련 내용	76
[표 3-15]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방식	77
[표 3-16]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78
[표 3-17]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대상	80
[표 3-18]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82
[표 3-19]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운영규정의 구성과 내용	83
[표 3-20]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전문분야	85
[표 3-21]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87
[표 3-22]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원 및 비율	90
[표 3-2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92
[표 3-2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방식	93
[표 3-25]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파·회피 기준	95
[표 3-26]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등 관련 내용	96
[표 3-27]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방식	97
[표 3-28]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98
[표 3-29]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대상	99
[표 3-3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및 주제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101
[표 3-3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103
[표 3-3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107
[표 3-3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110
[표 4-1] 주요 쟁점(안)	11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1.6월말 기준, 237곳 대상)	11
[그림 2-2] 지자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15
[그림 2-3] 공공기관 유형별 추진 사업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현황	23
[그림 2-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행 가능위원회 현황	28
[그림 2-5] 수탁사업에 대한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차이	30
[그림 2-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주체에 따른 심의 절차 차이	32
[그림 2-7]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인원 현황	33
[그림 2-8] 공공건축심의위원 전문분야	37
[그림 2-9] 심의위원장 선출방식 현황	38
[그림 2-1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 업무 절차 간소화 방안	46
[그림 2-11]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분리·연계 현황	48
[그림 3-1] 위원회 간 역할 대행 현황	56
[그림 4-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안)	115
[그림 4-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	11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어 제도 점검 필요

- 2019년 12월 19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된
 -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지자체 수 저조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75% 이상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 2021년 6월말 기준, 광역지자체의 경우 약 70.6%, 기초지자체의 경우 약 75.5%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음
- 타 위원회로 대신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필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타 위원회로 대신 운영하고 있는 비율

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약 91.7%, 기초지자체의 경우 약 76.5%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경우 별도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타 위원회 운영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표 1-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21.6월말 기준)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합계
별도 구성함	5(29.4%)	54(24.5%)	59(24.9%)
별도 구성하지 않음	12(70.6%)	166(75.5%)	178(75.1%)
타 위원회 활용*	11(91.7%)	127(76.5%)	138(77.5%)
소계	17(100.0%)	220(100.0%)	237(100.0%)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녕군 제외)

* 타 위원회 활용 비율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지자체 대비 비율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각 기관 별 담당자의 이해 부족

-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법정업무로 진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질의가 전체 자문 요청 건수 중 약 5.4%(41건) 차지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도입 취지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2월말 기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약 1.4%(11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사항 약 4.0%(30건)를 차지하고 있음

공공건축심의의 근본적인 취지 이해한 후 진행할 필요

공공건축심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공공건축심의는 타심의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님. '건축기획' 수행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공공건축심의의 주요 목적임을 상기하여야 함

출처: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 의견(원출처: 방재성 외. (2021).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p.52. 참고후 재정리)

- 도입 초기에는 주로 운영 및 절차에 대한 것이었으며, 현재는 심의대상, 심의위원 구성 관련 인력풀 요청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구성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어디에 문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하여야 하나, 본 기관은 관련 전문 인력 보유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체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만약 별도의 지원이 어려우시다면, 구성 절차나 심위원회 자격조건 등 관련 규정사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근시일 내에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혹시 추천해주시는 위원님이 있다면 분야별(계획, 설계, 도시, 조경)로 2분씩 추천해주시면 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OOOO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사업비 1,118백만원)을 준비하고 있고 공공건축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실시계획에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될 경우

1. 대상지 변경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공공건축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3. 혹은 심의과정이 간소화되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21), ‘자문에 대한 응답’ 일부 발췌 후 재정리.

■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이 발생

- 지자체 등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¹⁾
 - 법령상에는 심의대상, 대행 가능위원회, 인원, 전문분야, 임기, 개의기준, 제척·회피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시되어 있을 뿐, 위원(장) 선출 방법, 운영주기, 심의절차, 심 의자료 구성, 논의방식, 의결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 별 위원장, 위원 구성 방식 및 운영 방식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외 주무부처에 의해 고시된 내용 부재로 각 기관 별 별도의 조례 또는 지침, 방침

1) 현재 대부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지역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사회 추천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지자체에서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가 위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총괄건축가가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포함되어 있지 않다.(심경미·이혜원·김민경(2020), pp.100-101. 참고 후 연구진 작성)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 필요²⁾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이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자체 6곳(서울, 부산, 전북, 경남, 제주도), 공공건축 진흥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자체 1곳(충남)이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훈령, 예규 등으로 제정한 곳은 지자체 14곳(경북, 아산, 구미, 춘천, 영천, 청주, 이천, 광명, 시흥, 부여, 홍성, 광주 서구, 평택, 서산), 교육청 1곳(서울시 교육청), 공공기관 2곳(조달청, 우정사업조달센터)이 있음
- 이 외 의성,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방침으로 적용하고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법령 상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연구의 방법 : 심층인터뷰, 문헌조사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자 심층인터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등 조사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법제도, 운영규정 등 문헌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외 기관에서 작성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침, 매뉴얼 등의 구성내용 조사

2)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검색일: 2022.5.16.) 검색 후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 선행연구 동향

- (건축·도시 심의 관련) 이창무 외(2000), 권기범 외(2007), 김상호 외(2015), 김예성 (2021) 등은 건축·도시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전문가 등 관계자(심의 운영주체, 피심의자 등) 인식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요 경향으로 나타남
- (공공건축심의 관련) 공공건축심의의 경우, 운영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 되어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기존 건축·도시 심의와 달리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현황 파악과 실태분석이 중요한 상황임
- (공공건축 조성체계 구축 관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의 방법론 모색과 연구범위 설정을 위해 공공건축 조성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함. 전영훈 외(2016), 임유경 외(2017), 염철호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방재성 외(202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함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건축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그룹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이창무 외(2000) -연구목적: 서울시 건축심의회에 대한 논의를 심의자(심의위원), 피심의자(건축사) 대상 설문조	-심의자 및 피심의자 대상 설문조사	-시대별 건축심의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고찰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건축심의제도의 성격, 서울시 건축심의 운영,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방안)

	사를 통해 명시화하고 갈등의 유형과 정도, 개선방안을 제시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건축심의 개선방향 제언
2	-과제명: 서울시 건축심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최근 2005~2006년 서울시 건축심의의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권기범 외(2007) -연구목적: 서울시 건축심의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행 제도 체계상 역할과 한계, 운영과정 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심의자, 피심의자, 심의운영·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서울시 건축심의 제도 변천과정과 현황 -서울시 건축심의의 사례분석 및 설문평가 -건축심의 제도 개선방향 제언
3	-과제명: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건축심의제도 합리화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김상호 외(2015) -연구목적: 지자체 건축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시행 성과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운영방안 마련	-문헌조사 -건축심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심의 현장 참관 -건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및 의견수렴	-지자체 건축심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역할 및 기능 정립 -건축심의 정보허브 구축방안 마련
4	-과제명: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연구자(년도): 전영훈 외(2016) -연구목적: 서울시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업무 환경 조성	-문헌조사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면담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서울시 조직체계 정비 방안 제시 -서울시 공공건축의 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정책을 제언
5	-과제명: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임유경 외(2017) -연구목적: 지자체 공공건축 관리·지원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	-문헌조사 -센터 운영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지자체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과 업무실태 분석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방안 제시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 제시
6	-과제명: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연구자(년도): 염철호 외(2019)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TF 운영 -해외 사례조사	-공공건축 조성체계 및 프로세스 분석 -해외 주요 국가의 공공건축 조성체계 분석

	-연구목적: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필요한 통합관리체계의 제도 기반 마련		- 통합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및 정비방안 제시
7	-과제명: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 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자(년도): HJP건축사사무소(2020) -연구목적: 서울시의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 인력 및 조직, 기획 및 심의 과정 등을 검토하고 추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한 주요 범위나 논점 등을 도출	-문헌조사 -전문가 간담회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주제별 토론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이슈 검토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계획 제도 개선 및 서울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제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쟁점 도출
8	-과제명: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연구자(년도): 김예성(2021) -연구목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 제시	-문헌조사 -심의위원 및 공무원 인터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 분석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 내실있는 심의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제시
9	-과제명: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제도 개선 연구 -연구자(년도): 방재성 외(2021) -연구목적: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운영목표 설정 및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의 운영 개선 방안 제시	-문헌조사 -서울시 건축심의,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자(실무자) 면담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운영 현황 분석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분석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의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 공공건축 지원 관리 강화를 향한 중장기 과제 제시
본 연구	-과제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연구자(년도): 이혜원 외(2022) -연구목적: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자 심층인터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관련 제도 및 동향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지자체·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지자체·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조사 분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주요 쟁점 도출 및 향후 과제 제시

출처: 연구진 작성

■ 본 연구의 차별성

-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정립 등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구축
 -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
-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전문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현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제시
 -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 및 운영현황 측면에서의 쟁점 도출
 - 전문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관련 개선방향 제시

4. 연구의 흐름



[그림 1-1]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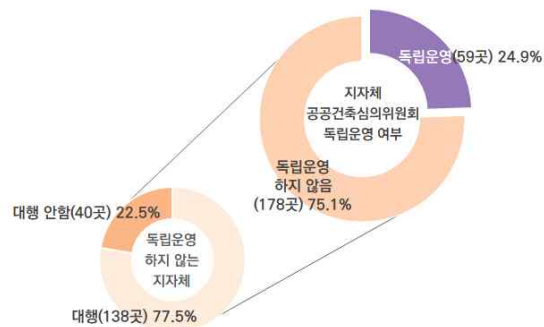
I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³⁾

■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방식) '21년 6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59곳(약 24.9%)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고 있고, 독립(별도) 운영하지 않은 178곳 가운데 138곳은 지방건축위원회 등 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1.6월말 기준, 237곳 대상)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제외) 참고 후 연구진 재작성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21년도 상반기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을 제외한 237곳의 현황을 정리함

■ 독립(별도) 운영 중인 지자체 59곳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평균 인원) 약 9명
 - 5~9인으로 구성된 지자체는 34곳(57.6%)으로 가장 많았고, 10~14명으로 구성된 지자체는 17곳(28.8%), 15~19명으로 구성된 지자체는 6곳(10.1%),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자체는 2곳(3.3%)이었음
- (심의위원장 평균 임기) 약 2.5년
 - 위원장의 임기 3년인 지자체는 25곳(42.4%), 임기 2년인 지자체는 21곳(35.6%)로 주를 이뤘고, 임기 1년인 지자체는 1곳(1.7%), 당연직으로 임기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5곳(8.5%)이었음
- (심의위원장 전문분야) 건축 분야 약 50.8%
 - 위원장 전문 분야는 건축이 30명(50.8%)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도시 3명(5.1%), 조경 1명(1.7%), 기타 16명(27.1%)이었으며, 기타 분야로 기재한 곳은 대부분 건축 도시 분야 국·과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됨
- (심의위원장 선출 현황) 당연직 약 49.2%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인 경우가 29명(49.2%)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15명(25.4%)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표 2-1] 독립(별도) 운영 중인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21.6월말 기준)

지자체		총 인원 (명)	심의위원장				비고
			성함	소속(직위)	전문 분야	임기 (년)	
광역시 (5)	충청남도	15	제해성	아주대학교(명예교수)	건축	2	총괄건축가
	경상북도	15	박동엽	건설도시국(국장)	-	3	공무원
	서울특별시	27	김성보	주택정책실(실장)	-	당연직	공무원
	부산광역시	14	김민근	건축주택국(국장)	건축	2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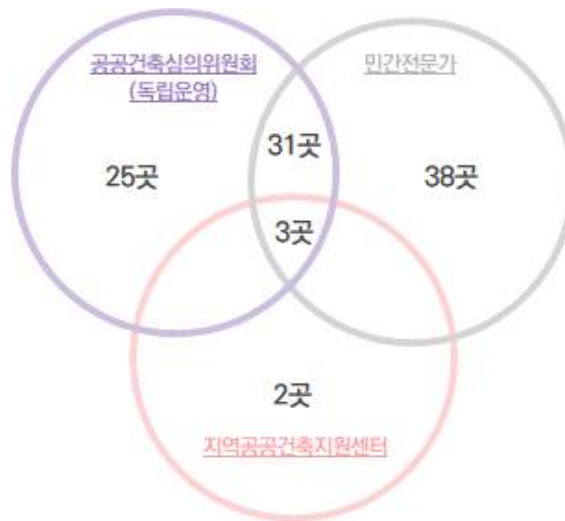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0	정동석	도시계획국(국장)	기타	당연직	공무원
기 초	경기 (10)	구리시	5	(호선)			
		동두천시	7	정우상	안전도시국(국장)	기타	공무원
		부천시	5	(호선)		3	
		성남시	17	최창규	도시주택국(국장)	건축	공무원
		수원시	9	이한은	라이브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2
		양평군	5	최준수	도시건설국(국장)	-	1년8개월 공무원
		용인시	10	(호선)		2	
		이천시	11	전재열	단국대학교(교수)	건축	3
		파주시	12	이기옥	(주)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3 총괄건축가
		평택시	10	최덕제	푸른도시사업소(소장)	조경	3
	강원 (6)	고성군	6	박행봉	종합민원실(실장)	기타	3 공무원
		원주시	7	주대관	(사)문화도시연구소(대표)	건축	3 총괄계획가
		인제군	5	전만호	행정복지국(국장)	기타	3 공무원
		정선군	5	김충영	도시과(과장)	건축	3 공무원
		춘천시	10	이민아	건축사사무소 협동원(대표)	건축	3 총괄건축가
		횡성군	11	김옥환	횡성군(부군수)	기타	3 공무원
	충북 (1)	청주시	10	신춘규	씨지에스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3 총괄건축가
	충남 (5)	부여군	7	강인호	한남대학교(교수)	건축	2 총괄계획가
		서천군	7	(미입력)			
		아산시	15	노종관	도시개발국(국장)	도시	3 공무원
		천안시	13	류훈환	건설교통국(국장)	기타	2 공무원
		홍성군	15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3 총괄건축가
	전북 (4)	순창군	5	도광택	민원과(과장)	건축	3 공무원
		완주군	7	남해경	전북대학교(교수)	건축	2
		임실군	5	하영진	건설과(과장)	건축	3 공무원
		정읍시	10	맹용인	도시안전국(국장)	기타	3 공무원
	전남 (3)	순천시	7	최윤경	중앙대학교(교수)	건축	2 총괄건축가
		진도군	16	윤영주	진도군(부군수)	기타	3 공무원

	함평군	10	안상만	민원봉사실(실장)	기타	3	공무원
경북 (5)	경산시	5	김동득	건축과(과장)	건축	3	공무원
	구미시	11	이우열	이룸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2	총괄건축가
	안동시	6	김원일	도시건설국(국장)	기타	1	공무원
	영천시	9	권종욱	영남대학교(교수)	건축	3	
	의성군	7	윤철재	경북대학교(교수)	건축	2	총괄건축가
경남 (9)	거제시	8	김근성	경상대학교(교수)	건축	2	
	고성군	13	(호선)				
	김해시	5	고인석	인제대학교(교수)	건축	2	총괄건축가
	남해군	10	안재락	경상대학교(명예교수)	도시	2	총괄계획가
	사천시	5	고영훈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건축	2	
	산청군	5	고영훈	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원장)	건축	3	
	진주시	7	최삼영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2	총괄계획가
	통영시	7	이순호	안전도시국(국장)	건축	3	공무원
	함안군	8	박장곤	산업건설국(국장)	도시	3	공무원
서울 (2)	관악구	5	(미입력)				
	성북구	7	(미입력)				
대구 (2)	달성군	5	정재용	건축과(과장)	건축	3	공무원
	수성구	12	신창훈	운생동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	2	총괄건축가
인천 (4)	부평구	11	김상섭	부평구(부구청장)	기타	당연직	공무원
	서구	8	하태석	SCALe(대표)	건축	2	총괄건축가
	연수구	5	허창렬	건축과(과장)	기타	당연직	공무원
	옹진군	27	오영철	옹진군(부군수)	기타	당연직	공무원
광주 (3)	동구	6	정성룡	도시관리국(국장)	기타	당연직	공무원
	북구	7	최상호	도시재생국(국장)	기타	3	공무원
	서구	7	송대우	안전도시국(국장)	기타	2	공무원
광역시(5) 기초(54)		평균 약 9명	건축 30명, 도시 3명, 조경 1명, 기타 16명			평균 약 2.5년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15명, 공무원 29명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제외)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비교

- 지자체의 경우 건축기획 단계에서 작동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계가능성이 높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촉해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2-2] 지자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 (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제외) 참고 후 연구진 작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은 제외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공공건축심의위원회(독립운영)-민간전문가 모두 운영 : 3곳
 - 충남, 서울, 부산은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으나, 충남만 공공건축심의위원장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서울과 부산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특징과 각 제도 간 관계 설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독립운영)-민간전문가 운영 : 31곳
 - 14곳(45.1%)이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심의위원장으로 위촉하였기 때문에 제도 간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 외 지자체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독립운영)만 운영 : 25곳
 - 19곳(76.0%)이 당연직 공무원을 공공건축심의위원장으로 위촉하였는데, 그 이유 및 장단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민간전문가만 운영 : 38곳
 - 38곳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위원회와 민간전문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2-2] 지자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여부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운영여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여부	지자체 (위원장 : 민간전문가●/ 공무원○ / 그 외○ / 호선)			합계
			광역시	기초		
설립	독립운영	운영	충남(●), 서울(○), 부산(○)	-	-	3
		미운영	-	-	-	-
	독립운영 X	운영	경남	-	-	1
		미운영	경기	-	-	1
미설립	독립운영	운영	경북(○), 인천(○)	경기 (5)	부천(호선), 성남(○), 수원(○), 용인 (호선), 파주(●),	31
				강원 (2)	원주(●), 춘천(●)	
				충북 (1)	청주(●)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여부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운영여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여부	지자체 (위원장 : 민간전문가●/ 공무원○ / 그 외○ / 호선)		합계	
			광역	기초		
				충남 (5)	부여(●), 서천(미입력), 아산(◎), 천안(◎), 홍성(●)	
				전북 (1)	정읍(◎)	
				전남 (1)	순천(●)	
				경북 (3)	구미(●), 영천(○), 의성(●)	
				경남 (8)	거제(○), 김해(●), 남해(●), 사천(○), 산청(○), 진주(●), 통영(◎), 함안(◎)	
				서울 (1)	성북(미입력)	
				대구 (1)	수성(●)	
				인천 (1)	서구(●)	
	미운영	-	-	경기 (5)	구리(호선), 동두천(◎), 양평(◎), 이천(○), 평택(○)	25
				강원 (4)	고성(◎), 인제(◎), 정선(◎), 횡성(◎)	
				전북 (3)	순창(◎), 완주(○), 임실(◎)	
				전남 (2)	진도(◎), 함평(◎)	
				경북 (2)	경산(◎), 안동(◎)	
				경남 (1)	고성(호선)	
				서울 (1)	관악(미입력)	
				대구	달성(◎)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여부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운영여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여부	지자체 (위원장 : 민간전문가●/ 공무원○ / 그 외○ / 호선)			합계			
			광역시	기초					
				(1)		38			
				인천 (3)	부평(○), 연수(○), 옹진(○)				
				광주 (3)	동구(○), 북구(○), 서구(○)				
	독립운영 X	운영	전북, 전남, 대전, 울산, 광주, 세종, 제주	경기 (6)	오산, 시흥, 양주, 화성, 남양주, 포천				
				충남 (3)	공주, 당진, 청양				
				전북 (2)	전주, 고창				
				경북 (2)	경주, 영주				
				경남 (8)	창원, 밀양, 양산, 의령, 함안, 하동, 거창, 합천				
				서울 (5)	동작, 서대문, 은평, 서초, 강동				
				부산 (1)	부산진구				
				인천 (2)	미추홀, 계양				
				대구 (1)	서구				
				대전 (1)	서구				
				미운영	3		135		138
				합 계			17	220 (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6곳 제외)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제외) 참고 후 연구진 작성

2)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⁴⁾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방식) 독립(별도)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기(既)운영 중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심의대상 사업 발생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일회성 위촉해 운영하는 곳도 있음
- (인원) 고정인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풀(pool)제로 운영해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65명까지 위촉한 곳도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풀(pool)제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재적(在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심의개최 시 5명의 심의위원(심의위원장 포함)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파행(跛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문분야) 대부분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 조경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분야로만 구성한 곳도 있고, 건축설비 분야를 포함한 경우도 있음
- (심의위원장 선출 현황) 당연직이 대부분이나, 조달청은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함
 - 조달청은 자체사업이 아닌 맞춤형서비스 사업⁵⁾의 공공건축심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당연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의 기간 및 예산상의 한계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 정리함

5)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008>(검색일:2022.5.24.))

[표 2-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현황('22.5월말 기준)

구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법무부	조달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한국전력 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연간 심의건수	10건 이내	-	-	120건 이내	40~50건 이내	-	12건 이내
독립 운영 여부	△ (일회성위촉)	○	X	○	○	△ (일회성위촉)	○
총 인원(명)	-	50	-	7	65	-	35
내부위원 비율	-	2%	100%	42.9%	53.8%	-	34.3%
전문분야(명)	-	건축35, 도시10, 조경5	-	건축7	건축, 도시·경관, 건축설비	-	건축25, 도시3, 조경7
심의위원장	당연직 (차관)	호선	당연직 (심의운영 부서장)	당연직 (심의운영부 서장(공공주 택사업처장) 또는 공공분 양사업처장)	당연직 (심의운영 부서장)	당연직 (사업 부서장)	당연직 (심의운영 부서장)
임기(년)	-	2 (1회 한하여 연임 가능)	-	1 (2회 한하여 연임 가능)	2	-	3
심의위원 선출방식	-	공개모집 (내부위원도 공개모집 절 차로 진행하 여 위촉)	-	추천	공개모집	-	공개모집 + 추천
개최주기	수시	수시	수시	정기 (월2회)	수시	수시	정기 (월1회)
비고	-심의 시 5~7명으 로 구성해 운영	-심의 시 5 명으로 구 성해 운영 (순번제)	-위원장이 위원선정 -내부위원으 로만 구성 -심의 시 5 명으로 구 성해 운영	-고정인원 제	-심의 시 5 명(사업 유 형별 내외 부 위원 구 성 비율 차 등 적용)으 로 구성해 운영	-심의 시 5 ~10명으 로 구성해 운영	-심의 시 5 명으로 구 성해 운영 (순번제)

					- 외부위원 30명은 모 두 공공건 축가		
--	--	--	--	--	---------------------------------	--	--

*△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풀(Pool)을 활용해 심의 대상 사업 발생 시 일회성 위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분함

출처: [표 2-7] 심층인터뷰 일정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관계자 인터뷰('22.04.~'22.05.)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공공기관 유형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⁶⁾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 사업에 차이가 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 시장형 공기업⁷⁾: 한국전력공사(내부위원 100%)
 -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發電)·송전(送電)·변전(變電)·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할 수 있음.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거나,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진할 수 있어 자체사업 위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견제·감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2017)에 따르면 위원 공모제, 공개추천제 도입을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

6) 기획재정부. (2022).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1월 28일 보도자료. 참고

7)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인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가목)

기관 내부 임·직원 참여를 제한해야한다고 한 만큼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 물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개선해야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나,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를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준시장형 공기업⁸⁾ : 한국토지주택공사(독립 운영/7명), 한국수자원공사(독립 운영/65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 토지 및 도시개발 사업,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음.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와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즉, 자체사업 위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2개 기관 모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 중에 있으나 구성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⁹⁾ : 한국자산관리공사(일회성 위촉)**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를 수행에 따라 자체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일회성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비중이 적은 자체사업 중심으로만 공공건축심의의를 진행하고 수탁사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공공건축심의의를 진행하기 때문인

8)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공공기관으로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나목)

9)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공공기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가목)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¹⁰⁾ : 한국농어촌공사(독립 운영/35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음. 특히 지역 개발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탁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수탁사업의 공공건축심의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 공공기관 유형별 추진 사업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10)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공공기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나목)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표 2-4] 조사내용

구분	세부 내용
기본사항	추진사업의 특성(자체사업 vs 수탁사업)
	설계공모 이전 공공건축 조성절차 관련 특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운영 방식(독립(별도) 운영 vs 대행)
	운영주체(전담부서(자) 유무 등)
구성	인원(회의 구성인원), 성별 비율, 전문분야, 임기
	자격기준
	심의위원 선출방식
	심의위원장 선출방식
운영	운영 근거
	개최주기(정기 vs 수시)
	심의 절차
	배석자(의견청취)
	심의 의결 구분(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등)
	조치계획서 회신 등 후속조치 모니터링
기능	심의대상 및 심의기능
	자문대상 및 자문기능

출처: 연구진 작성

- 조사내용 : 기본사항을 비롯해 구성, 운영, 기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 조사방법 : 심층인터뷰
 - 최대 2인 이내로 구성해 심층인터뷰를 하고자 하며,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밀도 있게 진행함
 - 인터뷰 대상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부서 담당자, 심의위원(장) 등으로 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지자체의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독립(별도) 운영 여부를 비롯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여부,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함

[표 2-5] 지자체 조사대상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여부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별도운영여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여부	지자체	
			광역시	기초
●	●	●	서울, 충남	-
X	●	●	-	청주, 의성
X	X	●	-	영주

출처: 연구진 작성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건축심의 제도가 의무화된 시점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기관 중 상위그룹에 위치한 기관¹¹⁾ 가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등 유형을 감안하여 선정함

11) 한국토지주택공사(78건), 한국전력공사(31건), 한국농어촌공사(22건), 한국철도공사(20건), 한국어촌개발공단(19건), 한국수자원공사(15건), 한국자산관리공사(13건), 국립공원공단(11건), 경기도남부경찰청(10건), 법무부(9건), 법원행정처(8건)

- 조달청을 추가한 이유는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표 2-6]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조사대상

no.	기관명		'20.1월~'21.11월 사전검토 신청 건수		공공기관 유형*
1	한국토지주택공사		77	78	준시장형 공기업
		동탄사업본부	1		
2	한국전력공사		29	31	시장형 공기업
		전력연구원	1		
		전북본부	1		
3	한국농어촌공사		10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지역본부	3		
		경북지역본부	1		
		공주지사	1		
		김해양산부산지사	1		
		부여지사	1		
		청양지사	1		
		토지개발사업단	1		
		하동남해지사	1		
		홍천춘천지사	1		
		제주지역본부	1		
4	한국수자원공사		15		준시장형 공기업
5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	법무부		9		중앙행정기관
-	조달청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4항에 따른 유형

출처: 연구진 작성

■ 심층인터뷰 일정

[표 2-7] 심층인터뷰 추진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이름	소속 및 직책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내 역할
지 자 체	1	22.01.25.	청주시청	신○○	청주시 총괄건축가	심의위원장
	2	22.01.25.	auri	염○○	auri 선임연구위원	심의위원
	3	22.02.14.	개별장소(온라인)	신○○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	심의위원
	4	22.02.15.	서울시청	유○○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 주무관	운영부서 담당자
				이○○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과 주무관	운영부서 담당자
5	22.02.16.	개별장소(온라인)	윤○○	의성군 총괄건축가	심의위원장	
중 앙 행 정 기 관 · 공 공 기 관	6	22.04.06.	한국수자원공사	박○○	공간디자인처 과장	운영부서 담당자
	7	22.04.21.	한국농어촌공사	조○○	그린스마트처 과장	운영부서 담당자
				문○○	그린스마트처 대리	前 운영부서 담당자
				박○○	그린스마트처 대리	운영부서 담당자
	8	22.04.21.	한국전력공사	임○○	사옥건설처 대리	운영부서
	9	22.04.25.	조달청	강○○	시설사업기획과 주무관	운영부서
	10	22.04.26.	법무부	김○○	시설담당관실 사무관	운영부서
	11	22.05.12.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공공주택개발처 차장	운영부서 담당자
	12	22.05.12.	한국자산관리공사	최○○	공공개발지원처 팀장	운영부서
				임○○	공공개발지원처 차장	운영부서
				홍○○	공공개발지원처 선임주임	운영부서

출처: 연구진 작성

2) 조사 결과 ① :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관련 사항

■ 운영방식 : 독립(별도) 운영(일회성 위촉 포함) or 대행 or 위탁¹²⁾

- 법에서 명시한 대행 가능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의 기관 내 유무에 따라 운영방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그림 2-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행 가능위원회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 (지자체 내 대행 가능위원회 운영으로 독립(별도) 운영 필요성 저조) 지자체의 경우 대행 가능위원회를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독립(별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음('21.6월말 기준 지자체의 77.5% 대행 운영)

12) 위탁기관(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수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의 업무까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미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속적인 구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도 구성 실패

영주시는 공공건축 조성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신 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효과적인 심의를 진행하려면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네요. 영주시의 원활한 공공건축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후략)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1.7.). 총괄·공공건축가에게 지역 공공건축 이야기를 듣다:신승수 영주시 총괄건축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Vol.24.(http://www.pcap.go.kr/_themes/default/upload/newsletter/57/sub01.html(검색일: 2022.1.13.))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중앙건축위원회로의 대행 요청 어려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나 '20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 단 2건('20.5월 1건, '20.6월 1건)에 대한 심의만 진행함.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대행 요청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표 2-8] 중앙건축위원회 공공건축심의 대행 현황

구분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	천사대교 관리사무소 건립
회의개최일	'20년 5월 1일 ~ 5월 13일	'20년 6월 16일 ~ 6월 22일
참석자	심의위원 7명	심의위원 7명
개최장소	서면심의	서면심의

출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내 국토교통위원회 운영현황 자료 (http://www.molit.go.kr/USR/cmit/m_1146/dtl.jsp?sch=&sch_kind=0&psize=10&sch_dt_s=&sch_dt_e=&sch_usr_nm=&sch_usr_titl=&sch_usr_ctnt=&lcmspage=2&idx=176, 검색일: 2022.5.24.)를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일회성 위촉 운영으로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우려) 일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독립(별도)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심의 개최 시 일회성으로 위촉해 운영 중인 곳이 있음. 이 경우 공공건축심의의 목적 및 취지,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관의 공공건축심의 내용의 일관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건축심의가 1년에 10건 이내로 개최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설 보안 및 운영체계 등이 중요한 법무시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외부전문가를 기존 위원회와는 별개로 명단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공개모집하여 구성한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에서 건축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심의 개최 필요시마다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6., 법무부 회의실)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일정기간의 임기를 가진 위원으로 독립(별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앙건축위원회 외 대행 가능위원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 별 추진 사업 특성(자체사업 혹은 수탁사업)에 따라 공공건축심의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수탁사업의 공공건축심의 위탁 수행)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조달청 제외)의 경우 자체사업을 추진하므로 기관에서 직접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조달청 및 공공기관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자체사업이 아닌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탁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주체(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5] 수탁사업에 대한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수탁사업에 대한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의 운영방식 차이) 조달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서 직접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회성 위

축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위탁기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공공건축심의까지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음

- 법령 상 관련 내용이 부재해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원칙을 설정해야 함

위탁기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지 않거나 일정 상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신 진행합니다. 원칙을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공사에서 공공건축심을 대신 진행하고 심의결과를 위탁기관에 전달했을 때 수용하지 않는다해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위탁기관 혹은 공사에서 진행한다 해도 공사 내 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기획이 확정된 후 진행되므로 어디에서 진행한다 해도 심의 진행 시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1.,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수요기관(위탁기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기획단계까지 수요기관(위탁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달청의 사업담당 감독관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요기관(위탁기관)에서 주도로 작성하고 있는데,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것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위탁기관)이 단계별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지어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에요.

수요기관(위탁기관)에서 직접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조달청의 사업담당 감독관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심의 때 심의를 받는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조달청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출처: 조달청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5., 조달청 회의실)

■ 운영 주체 : 운영부서(전담자) or 관리부서(규정 및 명단 관리)+사업부서(심의개최)

- 연간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 건수에 따라 운영부서(전담자)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지자체 운영부서(전담자) 존재) 지자체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는 경우 운영부서(전담자)가 있고, 대행 가능위원회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의 운영부서(전담자)가 있음. 따라서 사업부서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부서에 심의 의뢰 및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운영부서가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견을 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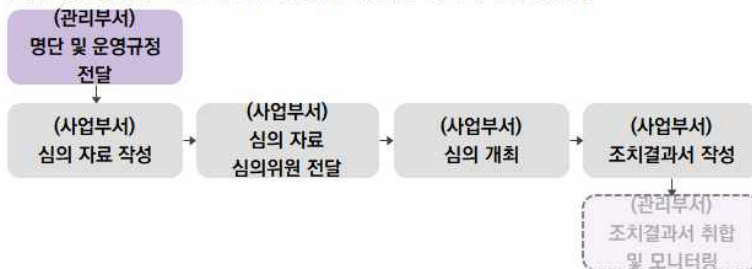
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가 조치결과서를 작성한 후 운영부서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운영부서(전담자) 대부분 부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담하는 전담자가 있는 기관은 자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임

[전담하는 운영부서(전담자)가 있는 경우]



[명단 및 운영규정 관리부서와 심의 운영 부서(사업부서)가 각각 있는 경우]



[그림 2-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주체에 따른 심의 절차 차이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업부서 심의 개최·운영 시 셀프 심의 우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및 운영규정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공공건축심의는 각 사업담당자가 직접 개최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셀프 심의’의 형태로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사옥건설처에서는 지사사옥 건설 사업만 담당하고, 변전소는 별도의 담당부서가 있어 각자 공공건축심의의를 진행합니다. 사옥건설처 내에서도 전담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단과 운영지침 및 절차서를 가지고 각 사업별 담당자가 심의를 직접 개최하고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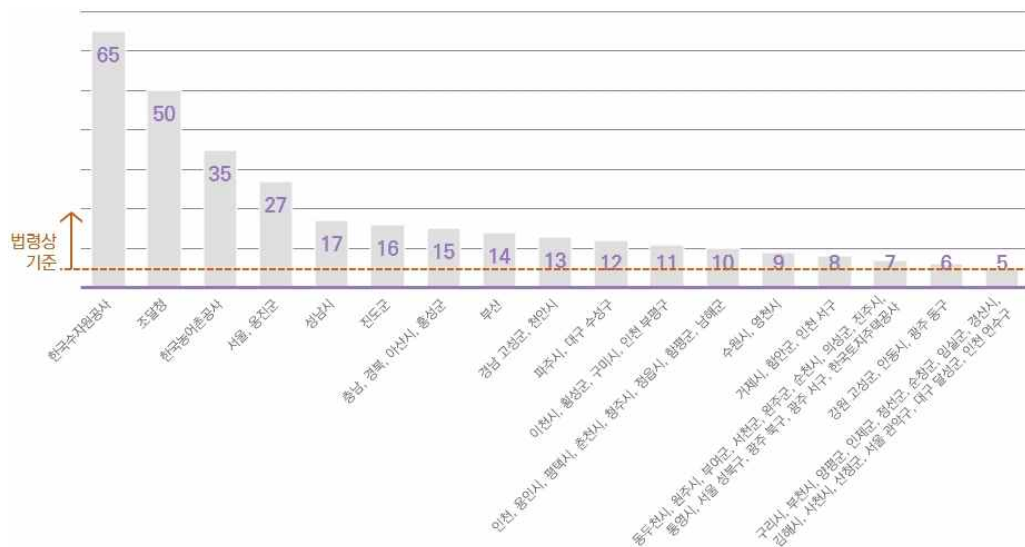
공공건축 사업량이 많지 않아 전담부서(전담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설계공모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적절할 거 같고 그 팀에서 공공건축심의 운영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사 내 여건 상 적절한 거 같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1., 한국전력공사 회의실)

3) 조사 결과 ② : 구성 관련 사항

■ 인원 및 개의회준 : 고정인원제 vs 풀(pool)제

- 법령 상 최소인원 규정(5명 이상)만 있어 심의위원회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그림 2-기]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인원 현황(단위: 명)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제외) 및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지자체 59곳(독립운영), 공공기관 4곳(독립운영))

- (기관 별 심의위원회 인원수 차이) 지자체의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 중인 59곳 중 25곳이 심의위원을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었고, 중앙행정기

관·공공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풀(pool)제를 활용하고 있음

총 27명의 풀(pool)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 개최 시마다 그 가운데 9~11명(건축 6명, 도시 2명, 조경 1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바쁘시다보니 고정된 인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심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 (개의(開議) 기준을 위반한 파행(跛行) 가능성)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재적(在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풀(pool)의 규모가 큰 경우 법령을 위반한 채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기관별 운영 및 구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2-9]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적인원 및 회의 구성인원 비교(단위:명)

구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적인원(재적위원의 과반수)	심의개최 시 구성인원(위원장 포함)	파행(跛行) 여부
서울특별시	27(14)	9~11	●
청주시	10(5)	10	X
의성군	7(4)	7	X
조달청	50(25)	5	●
한국수자원공사	65(23)	6	●
한국농어촌공사	35(18)	6	●
한국토지주택공사	7(4)	7	X

출처: 서울특별시(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조달청(2022.4.25., 조달청 회의실), 한국농어촌공사(2022.4.21.,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한국수자원공사(2022.4.6.,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한국토지주택공사(2022.5.12.,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 각 기관별 관계자 심층인터뷰 내용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내부위원 비율

- 원활한 개의(開議)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

- (내부위원 100% 구성) 일부 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의를 원활하게 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판단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풀(pool)로 운영하고 있음

공사 내에서 주로 추진되는 공공건축 사업인 변전소의 경우 특수한 사업으로 이해도가 있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업던 상황이라 외부위원을 포함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부위원은 관리직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1., 한국전력공사 회의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내부위원에 대한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기관에서는 변경해야 함

[표 2-1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내부직원 비율 관련 개정령안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현행	개정령안
내부 직원 비율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5.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위촉 대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출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9(검색일: 2022.5.30.)) 검색 후 연구진 재정리

■ 전문분야 : 현행 유지(건축·도시·조경) or 분야 축소(도시·조경 제외) or 분야 확대(전기·통신·소방 등 추가)

- 모호한 심의대상(공공건축 사업) 및 심의내용으로 건축 외 전문분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

- (모호한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사업을 말하고 있으나, 공간환경 사업이 불분명하여 대부분 개별 건축물 단위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도시·조경 분야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기관은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함

도시,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 분들 가운데 전문가가 있어 자문을 받고 있어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초기 공공건축 심의대상 리스트를 확인한 후 대부분의 사업 성격이 개별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건축분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었어요.

출처: 윤철재 의성군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2022.2.16., 개별장소(온라인))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에는 건축 외 도시, 문화기획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단계에서 이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건축심의는 테크니컬한 과정으로 건축분야의 경력(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요.

출처: 신승수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공공건축심의위원 심층인터뷰(2022.2.14., 개별장소(온라인))

- (건축기획 내실화를 통한 도시·조경 분야 활용 증대 필요) 반면, 도시·조경 분야 심의위원 활용은 건축기획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 도시·조경 분야 심의위원 활용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원 내 계획하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경우 조경 분야 심의위원의 의견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는 포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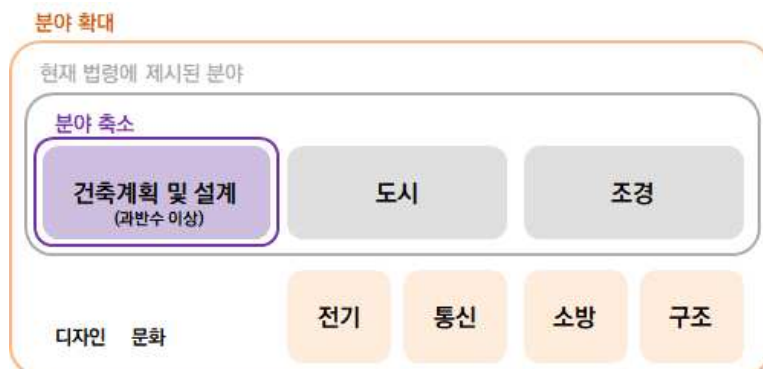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 관련 법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전기·통신·소방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로 일부 건축설비 분야 등 전문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분리발주 분야 검토 필요) 설계용역 발주 이전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특히 분리발주 하는 전기·통신·소방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리모델링 사업 증가에 따른 구조 분야 검토 필요)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조 등 전문가로부터의 검토 필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리모델링, 실내 인테리어 사업도 공공건축 심의대상이므로 구조를 비롯해 분리발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서울특별시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 다만, 분야 축소 혹은 분야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기획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라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검토해야 함



[그림 2-8] 공공건축심의위원 전문분야

출처: 연구진 작성

■ 심의위원장 선출방식 : 호선 or 지정(외부위원 or 당연직(내부위원))

- 심의위원장 선출방식은 심의위원회 인원수(고정인원제 혹은 풀(pool)제)와 타 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일회성으로 위촉하는 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



[그림 2-9] 심의위원장 선출방식 현황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미제출한 울산광역시 관할 자치구·군, 경남 창원군 제외) 및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지자체 56곳 (독립운영 59곳 중 미입력 3곳 제외), 중앙행정기관 2곳, 공공기관 5곳)

- (높은 당연직 비율) 내부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여 심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 선출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표 2-1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출 관련 개정령안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현행	개정령안
심의 위원 장 선출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 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① ----- ----- ----- 다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9(검색일: 2022.5.30.)) 검색 후 연구진 재정리

-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당연직(내부위원) 활용) 인터뷰 결과, 당연직(내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풀(pool)제 혹은 일회성 위촉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본 제도의 목적,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당연직(내부위원)을 활용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심의위원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부서인 그린에너지처장(당연직)이 맡고 있어요. 공사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이 맡을까 우려가 됩니다.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1.,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 다만, 일회성 위촉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풀(pool)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심의 개최할 때마다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보다는 지정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본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외부위원이 심의위원장이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즉 본 제도 및 사업 특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개정령안이 시행될 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풀(pool)제로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쩌다 한번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판단됩니다. 풀(pool)제라 하더라도 위원장1, 위원장2로 지정해 번갈아가며 운영되어야 할 거 같아요.

출처: 윤철재 의성군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2022.2.16., 개별장소(온라인))

■ 심의위원 선출방식 : 공개모집 or 학협회 등 추천 or 지정(기관에서 위촉한 민간전문가 등)

- 각 기관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

- (전문성 검증에 한계)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공개모집 시 스스로 추천(自薦)하다 보니 자격기준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성 검증에 한계가 있어 심의의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보니 일부에서는 공개모집 없이 추천 등을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하기도 함

공공건축심의위원 65명 중 외부위원 30명은 모두 공사에서 위촉한 공공건축가입니다. 이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을 했는데, 자천(自薦)에 따른 전문성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중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6.,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공개모집 없이 협회장, 학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에서 주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명망 높은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체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풀(pool)제로 하지 않은 것은 공사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으로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5.12.,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

- 바람직한 심의위원 선출방식은 심의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운영 실태를 다시 살펴본 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선출방식이 문제인 지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이 문제인 지 현재 상황에서는 확 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4) 조사 결과 ③ : 운영 관련 사항

■ 배석자(의견청취)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심의 등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심의개최 시 배석자(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일반적으로 사업담당자만 배석) 일반적으로 심의대상 사업의 담당자가 배석해 기획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담당자의 의견청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일부 광역지자체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대상 사업의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담당인 사람도 배석하게 하여 검토 시 주안점 및 특이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건축기획 용역 수행자 혹은 건축기획 단계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배석) 건축기획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시 해당 용역 수행자를 배석하게 하여 질의응답에 대응하게 하기도 하고, 건축기획 단계에서 자문을 수행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를 배석하게 하여 해당사업의 주안점 및 특이사항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기도 함

심의의견 전달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때 건축 관련 사항은 공공건축가 또는 용역참여자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며, 행정 관련 사항은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장 심층인터뷰(2022.1.25., 청주시청 총괄건축가실)

- 대면회의로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심의 참석자의 구성과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해야 건축기획의 내실화 및 설계 발주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고민이 필요함

■ 의결구분

- 일반적으로 원안(의결), 조건부, 재심의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건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공공건축심의 이전 건축기획 단계에서의 민간전문가가 밀도 높은 자문을 수행함에 따라 원안(의결) 비율이 높았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의결구분 없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에 대한 반영, 미반영 여부를 체크하고 심의위원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업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심의의견 종합정리 및 후속조치 등

- 심의의견에 대한 종합정리 등에 대해서는 운영부서(전담자)가 있거나 민간전문가(총괄 건축가)가 위원장인 경우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특히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기관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종합의견 형식으로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있으나, 운영부서(전담자) 없이 사업담당자가 심의를 직접 개최하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기관은 심의위원 각각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지 않고 사업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치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운영부서(전담자)가 있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
 - 일부 운영부서(전담자)가 있는 경우 조치결과에 대한 문서 회신을 받고 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물론 서울시는 의결 기준 중 '조건부보고 의결'이 있어 이 경우 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한 후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도록 함
 -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회신 절차가 없으며, 특히 운영부서(전담자) 없이 사업담당자가 심의를 직접 개최 및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음

조건부 의결 혹은 조건부보고 의결 중 심의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조치결과 확인 후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발주 일정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심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 받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프로세스 상 다시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신승수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층인터뷰(2022.2.14., 개별장소(온라인))

■ 심의운영 등 모니터링

- 심의운영, 즉 심의절차, 심의내용, 심의의견, 조치결과 회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심의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사업부서에서 작성하고 있긴 하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전담부서 및 전담자가 없어 이를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5.12.,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의실)

5) 조사 결과 ④ : 기능 관련 사항

■ 심의대상 및 기능

- (심의대상)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 사업에 대해, 수탁기관의 경우 수탁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인터뷰 결과, 대부분 법령에서 명시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다만, 충남의 경우 국비 혹은 도비가 지원된 관할 기초지자체 사업에 대해 충남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는 수탁사업에 대해 공공건축심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심의 대행을 위한 심의대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심의기능) 유사한 시점에 유사한 자료로 진행되는 다른 절차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음
 - 기관 별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상황은 아니나, 공공건축심의 기능과 중복되는 절차에 대한 검토와 이들과의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심의시점 및 심의자료가 유사하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로 개선하기 위해 심의자료 및 심의내용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시행 방침 확정 후 진행되는 용역시행타당성 심의(설계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공공건축심의(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기술심의(설계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복된 자료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기술심에서는 주로 용역설계서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설계지침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6.,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표 2-12] 한국수자원공사 건축사업 추진절차 중 설계발주 전 심의 등 절차

설계비추정가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공건축심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용역타당성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규정」 기술자문(검토)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5천만 원			
2억 원			
5억 원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심의자료	건축기획 자료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 사항)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용역설계서)	사업개요 설계지침서 용역설계서	사업개요 설계지침서 용역설계서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 (미상). '건축사업 추진절차'.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자문대상 및 기능

- (자문대상) 심의 기능 외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없어 법령 외 별도의 자문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자문기능)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음. 민간전문가도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0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에 따라 건축 및 도시,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어 자문 기능의 중복 가능성이 높음
 -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자문은 민간전문가의 기능으로 심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함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서 하고 있지 않아요. 민간전문가 즉,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로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운영규정 상 심의 및 자문 기능을 담고 있으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 역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출처: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2022.1.25., 청주시청 총괄건축가실)

- 서울시의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건축정책위원회와 총괄건축가 제도와의 자문내용 및 시기(설계용역 발주 전) 중복 문제로 절차를 간소화함.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은 공공건축 심의대상일 경우 생략하고,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총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하는 등 공공건축심의에서 기존 자문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조정함¹³⁾



[그림 2-1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 업무 절차 간소화 방안

출처: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미상). 공공건축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안). p.3. 참고 후 연구진 재작성

- (각 제도 구분 운영 시 의견 상충 가능성 대비) 기관에서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자문한 공공건축 사업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자문내용과 심의의견이 상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건축가가 자문한 사업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접수되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심의 개최 시 공공건축가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문은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는 청주시 공공건축가 가운데 건축분야 전문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문한 사업은 심의 진행 시 회피하시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처: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2022.1.25., 청주시청 총괄건축가실)

13)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미상). 공공건축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안). p.3.

- (각 제도 연계 운영 시 사업추진 주체, 심의주체 동일 시 되는 것에 대해 대비) 제주, 당진의 경우에는 자문, 사업추진 주체와 심의주체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심경미·이혜원·김민경(2020), p.120.) 때문에 다각도에서 살펴보긴 해야 함
- 물론 일부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법적 절차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활용해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두 제도의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전문가가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풀(pool)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들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기능 상 연계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근거법이 달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출처: 신승수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층인터뷰(2022.2.14., 개별장소(온라인))

의성군은 민간전문가가 기획단계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건축기획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상만을 가지고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자문 형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작동되면서 심의를 진행하니깐 보완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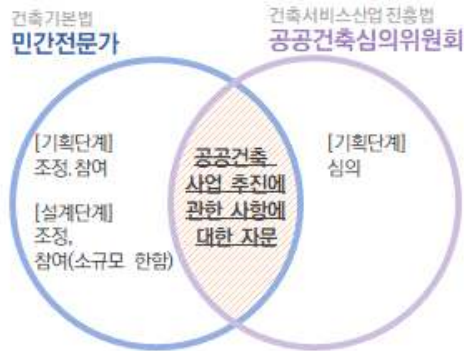
출처: 윤철재 의성군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층인터뷰(2022.2.16.) 내용 정리

- (자문 요청 시 자문수당 지급 근거 제시 필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사례가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건축기획 단계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절차가 별도로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할 경우 소요예산 추가 발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수당 지급 근거 제시가 필요함

자문 요청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내 위촉한 공공건축가 30명이 있어도 이들을 기획단계 자문에 참여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6.,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법령상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현황1.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분리



현황2.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연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포함하되,
자문기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



[그림 2-11]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분리·연계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3. 소결

■ ①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관련 사항

- (지자체 대행 위원회 활용 시 일관성, 전문성 확보 위한 지원 필요) 독립(별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나 대행 가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공건축심의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독립(별도)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타 기관 운영 사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풀(pool) 제공에 대한 검토 필요. 이 외에도 독립(별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하나 일회성 위촉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적용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와 연간 심의건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독립(별도) 운영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대행 가능 위원회 확대 도입에 대해 검토 필요
 - (일회성 위촉 운영 지향) 심의 개최 시 단발적으로 기(既)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등을 활용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본 제도 도입 취지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6항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기적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대행 가능 위원회 추가 검토 필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대행 가능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에 대행 요청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간 공공건축 심의 건수를 감안하여 독립(별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행 가능 위원회 추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건축심의 위탁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장소 단위가 아닌 사업 단위 심의 추진으로 기존 건축·도시 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과 달라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경우 위탁기관 혹은 수탁기관 어디에서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므로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 이는 심의대상 확대와 연계된 사항으로 광역-기초지자체, 위탁-수탁 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통해 공공건축심의의 운영(주최)기

관을 명확히 할 필요

-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의 운영 지원 필요) 운영부서(전담자) 없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심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경우 공정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 심의자료, 심의내용, 심의의견 작성 및 전달, 조치결과 회신 등에 대한 가이드 제공에 대해 검토 필요

■ ② 구성 관련 사항

- (개의(開議) 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원 구성 관련 안내 필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고정인원제, 풀(pool)제 방식 모두 활용이 가능하여 최소 5명에서 최대 65명까지 기관 별 규모 차이가 있음. 다만, 풀(pool)제 방식을 활용하는 기관이 재적(在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는 법령에 위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
-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전문분야 활용 방안 검토 필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 조경 분야로 구성하는 현행 법령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음. 이것이 법령 상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인지, 기관 내 운영규정 상 전문분야를 건축 등 분야로 축소했기 때문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
-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원 구성 방안 검토 필요) 외부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개정령안 시행 시, 본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당연직(내부위원)을 심의위원장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심의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방식의 문제였는지, 자격기준이 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판단되므로 개정령안 시행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

■ ③ 운영 관련 사항

- (건축기획 내실화 등을 위한 심의진행 방식 검토 필요) 본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 시점에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기관이 많으나 일부 대면회의의 진행 사례

를 바탕으로 건축기획의 내실화 및 바람직한 설계 발주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의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심의 개최 시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심의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배석자 범위 설정 필요
- 심의의견 종합정리는 공공건축 사업 추진 담당자가 원활한 조치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하나의 결로 정리해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
-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조치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심의개최 이후 조건부 등의 의결을 받은 공공건축사업은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작성해 심의개최 및 운영부서로 회신해야 하나, 사업부서에서 직접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6항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심의절차, 심의내용, 심의의견, 조치결과 회신, 심의위원 평가 등 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모색 필요

■ ④ 기능 관련 사항

-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심의대상 및 심의주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대부분 기관에서 추진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타 기관(광역의 경우 기초지자체, 수탁기관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공건축심의를 대신 주최하는 경우가 있어 광역-기초 지자체, 위탁-수탁 기관 간의 관계정립을 통해 공공건축심의의 운영(주최)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
- (유사한 심의시점, 심의자료로 진행되는 심의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 용역타당성 심의, 기술자문(검토), 계약심의 등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심의의 기능과 중복되는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로 개선 필요

-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민간전문가 자문기능과 중복 대비 필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데,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와 중복 가능성 있음. 각 제도의 구분 운영 시 혹은 연계 운영 시 장단점을 살펴본 후 최적의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필요

III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 배경

-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이 큰 공공건축물이 갖고 있던 특색 없는 디자인, 기능 중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2018년 12월 18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고, 2019년 12월 19일 시행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을 제시함
 - (심의)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자문)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한 검토 필요. 일부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자문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EC%82%B0%EC%97%85#J19:3\(검색일: 2022.2.3.\)\)](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EC%82%B0%EC%97%85#J19:3(검색일: 2022.2.3.))) 검색 후 연구진 재정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에서 인원 및 성별, 분야 등의 구성 원칙과 임기, 개의(開議) 및 의결 기준 및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등 회의 운영 기준 등을 제시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 인원 및 성별 : 5명 이상(위원장 포함), 성별 균형 고려
- 분야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과반수 구성)
- 임기 : 3년 이내(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 개의 및 의결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공개 여부 : 공개하지 않음(필요시 녹음 또는 녹화 가능)
- 회의록 작성 기준 :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심의 안건 및 내용, 의결 결과를 포함
- 심의위원 제척·회피 사유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EC%82%B0%EC%97%85#J19:3>(검색일: 2022.2.3.)) 검색 후 연구진 재정리

-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3-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관련 개정령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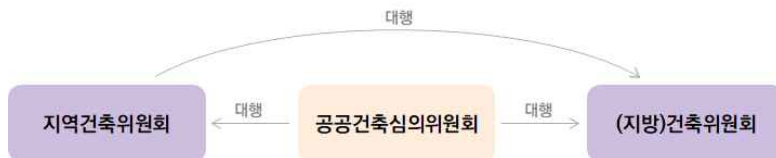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현행	개정령안
심의 위원 자격 기준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건축설계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도시 및 조경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도시 및 조경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이며 위촉 대상 분야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건축과 관련된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이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위촉 대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출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739(검색일: 2022.5.30.)) 검색 후 연구진 재정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8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정하도록 해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분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에서 차이가 있음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만 다른 두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건축위원회만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함



[그림 3-1] 위원회 간 역할 대행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 3개 위원회 모두 심의 기능이 주요 역할이나, (지방)건축위원회는 조사, 조정, 재정 등 부가적인 역할이 가능하고 비교적 명확한 심의 운영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운영 중이며 심의절차 및 방법, 심의기준, 심의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비교

구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근거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기본법	건축법
목적 (역할)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심의 및 자문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심의 및 그 밖의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조 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
주요 기능	-건축기획 심의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 항 자문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 건축행정 개선 -건축문화 기반조성 활동	-조례 제정·개정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사항
대행 가능 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건축기본법) -(지방)건축위원회(건축법)	-(지방)건축위원회(건축법)	-
전문 위원회 운영	-	-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계획,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전 문위원회
관련 조항	-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 위원회) -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령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4조(건축위원회), -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관련 규정	-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고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EC%82%B0%EC%97%85#J22:3>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A%B8%B0%EB%B3%B8%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A%B8%B0%EB%B3%B8%EB%B2%95#undefined>(검색일: 2022.2.14.)
 검색 후 연구진 작성

- 대행 가능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지자체에 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됨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즉 중앙건축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교

구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국토교통부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위원수	-5명 이상(위원장 포함)	-조례에서 정함	-25명 이상 150명 이하(위원장 포함)
위원 자격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 및 조경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과반수	-조례에서 정함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3년 이내	-조례에서 정함	-3년 이내
개의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조례에서 정함	-구성위원(회의참여 확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요 심의 내용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법 제22조의3)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 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령 제19조의3)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 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령 제5 조의5)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정·시행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및 운영규 정 근거	-해당 기관이 정함	-조례에서 정함	-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조례에서 정함
심의 기준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고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EC%82%B0%EC%97%85#J22:3>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A%B8%B0%EB%B3%B8%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undefined>(검색일: 2022.2.14.)
 검색 후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 3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에서 차이가 있음.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시행령을 비롯해 해당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건축위원회는 조례, (지방)건축위원회는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지 않고 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게 한 것은 기존 건축·도시 관련 심의위원회가 중앙 및 지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지방의 경우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한 것에 반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 지자체 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공기관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기관에 따라 조례나 운영규정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개 위원회별로 위원 규모와 자격에 차이가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지역건축위원회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제한한 것은 개의(開議) 조건이 재적(在籍)인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심의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이에 반해 (지방)건축위원회는 개의(開議) 조건이 회의 참석을 확정된 구성인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최소인원 뿐만 아니라 최대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됨
-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타 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목적 및 기능, 구성 차이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현황

-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4개 총 22개의 지자체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¹⁴⁾
 - 광역지자체는 2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5개 광역도(경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와 1개 광역교육청(서울)이 운영규정을 제정함
 - 운영규정을 제정한 기초지자체를 광역지자체로 구분하면 경기 4개소, 충남 4개소, 경북 3개소, 충북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로 구분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독립(별도)운영과 규정 제정은 상관성이 높음
 - 운영규정을 제정한 광역지자체 8개 가운데 5개, 운영규정을 제정한 기초지자체 14개 가운데 11개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운영규정을 제정한 22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고 있어 운영규정 제정과 독립(별도) 운영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비롯해 별도의 운영규정까지 제정한 곳도 있었으나, 기초지자체는 주로 훈령으로 제정
 - 6개의 광역지자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례로 제정하고, 그 가운데 충남, 서울, 부산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별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로 제정. 경북은 훈령, 서울시 교육청은 규칙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
 - 14개의 기초지자체 중 10개소는 훈령으로, 광명, 부여, 평택은 조례로 운영규정을 제정함. 의성은 내부 방침으로 규정하고, 자치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유일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함. 10개소 모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례는 미제정

14)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조례, 훈령, 규칙, 방침의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내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을 명시한 경우에도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4]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제정일자 순으로 정리)

	구분	명칭	형식	제정일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독립운영
광역시 지자체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1.13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2020.03.10	●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방침	2020.0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0.03.26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방침	2020.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2020.05.27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방침	2020.06.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2020.7.30	●
	전라북도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05.14	
기초지 자체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09.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2021.12.31	
	아산시 (충남)	아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4.06	●
	의성군 (경북)	의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방침	2020.04.23	●
	구미시 (경북)	구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8.05	●
	춘천시 (강원)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08.13	●
	영천시 (경북)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0.10.14	●
	청주시 (충북)	청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1.08	●
	이천시 (경기)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4.07	●
	광명시 (경기)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21.04.16	
	시흥시 (경기)	시흥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7.05	
	부여군 (충남)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21.07.26	●
	홍성군 (충남)	홍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1.03.15	●
	광주 서구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22.01.10	●
	평택시 (경기)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2022.03.02	●
	서산시 (충남)	서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2022.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r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및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광역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 특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조례 내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

[표 3-5] 광역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구성과 내용 (음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항)

구분	충남	서울	부산	서울시 교육청	경북	전북	경남	제주
	조례	조례	조례	규칙	규정	조례	조례	조례
총칙	6	4	2	3	1	4	4	4
전담조직	1							
민간전문가 참여	1							
역량있는 건축사		1				1		
건축기획	1	2				1	1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1	3	1			2	2	1
사전검토		1	1			1	1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1	1	1			1	1	1
위원회 구성 (자격, 임기)	2	1	2	1	2	1		2
위원장의 직무			1		1			1
위원회 운영(회의, 기능, 소위원회)	1	2	1	3	3	2	1	1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2		1	2	2			1
기타(의견청취, 비밀유지, 간사, 수당, 운영세칙)			3	3	4			2
발주 및 설계공모		1	2					1
설계의도구현	1	1						
공공건축의 연구, 개발, 정보체계 구축, 인력 양성	2	2	1			1		1
시행규칙 위임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6개 조	4개 조	9개조	12개 조	13개 조	4개 조	2개 조	8개 조
조례(규정)의 총 조항	19개 조	19개 조	16개 조	12개 조	13개 조	14개 조	10개 조	18개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조례는 일반적으로 총칙(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 등),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기획,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공공건

축심의위원회, 발주 및 설계공모, 설계의도구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공공건축의 연구, 개발, 정보체계 구축, 인력 양성) 관련 내용을 포함

- 위원회의 설치, 구성(자격, 임기), 위원장 직무, 운영(기능, 회의, 소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회피·해촉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조례가 아닌 방식으로 규정한 경북과 서울시 교육청의 운영규정은 자세하게 구성하고 있음
- 서울, 부산, 충남은 조례 외에 별도의 세부기준(운영기준, 세칙, 매뉴얼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충남은 심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3개 지자체 모두 신청서, 의결서 등 별도의 관련서식들을 규정하고 있음

[표 3-6] 서울, 부산, 충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과 내용

구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20.07)
1	목적	목적	심의 배경 및 법적 근거
2	적용기준	용어의 정의	심의 대상 및 내용
3	운영원칙	심의자문	심의 절차 및 방법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건축기획업무의 적정성 심의 내용
5	심의개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심의 내용
6	회의록 작성 및 심의공개	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지침서의 적정성 심의 내용
7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심의신청 및 절차 등	건축기획업무의 보완 여부 심의 내용
8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제출도서	
9	안건 상정 등 심의 절차	현지조사	
10	심의의결방법	재심의	
11	안건 처리	간사 및 서기	
12	이의신청등	비밀엄수	
13	기타	기록·관리 등	
관련 서식	심의(자문)신청서	의결의 종류	심의 신청서
	심의결과서	심의 신청서	심의 신청 세부자료 (사전검토 비대상)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심의위원 사전검토 의견서	심의 신청 세부자료 (사전검토 대상)
	이의신청서	심의 의결서	
		기피 신청서	
		회피 신청서	

출처: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20.07.)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기초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 특성

- 기초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형식은 조례(3개), 훈령(10개), 방침(1개)으로 구분되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방침은 조례 및 훈령과 달리 조항으로 구분되지 않음
- 목적, 위원회 기능(설치), 구성(자격),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운영) 관련 조항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포함하고 있으며, 시흥이 유일하게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3-7] 기초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규정)의 구성과 내용

구분	조례			훈령										방침
	광명	부여	평택	아산	구미	춘천	영천	청주	이천	시흥	홍성	광주서구	서산	
목적	1	1	1	1	1	1	1	1	1	1	1	1	1	
정의		1	1	1									1	
기능(설치)	1	1	1	1	1	1	1	1	1	1	1	1	1	○
구성(자격)	1	1	1	1	1	1	1	1	1	1	1	1	1	○
임기	1	1	1	1	1	1	1	1	1	1	1	1	1	○
위원장 직무	1	1	1	1	1	1	1	1	1	1	1	1	1	○
심의신청 등	1	1								1		1	1	
회의(운영)	1	1	1	1	1	1	1	1	1	1	1	1	1	○
소위원회										1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1	2	2	2	2		2			2	2	2	2	○
심의(자문) 의결(기준)	1	1	1	1	1	1	1	1		1	1	1	1	○
결과 조치(처리 기간)	1					1		1	1					
간사 및 서기	1	1	1		1	1	1	1	1		1			○
의견 청취		1	1	1	1	1	1	1	1	1	1	1	1	
비밀유지	1	1	1	1	1		1	1		1	1	1	1	
수당 및 여비		1	1	1	1		1		1	1	1	1	1	
적용(준용)	1					1								
운영 세칙		1	1	1	1	1	1	1	1	1	1	1	1	

구분	조례			훈령										방침
	광명	부여	평택	아산	구미	춘천	영천	청주	이천	시흥	홍성	광주서구	서산	의성
규정의 총 조항		13개 조	16개 조	15개 조	15개 조	14개 조	12개 조	14개 조	12개 조	11개 조	14개 조	14개 조	14개 조	15개 조
별지	신청서	●	●							●		●		
	의견서	●								●				
	의결서									●		●		●
	심의(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							●		●		
	위원 기파 회피 신청서		●	●	●		●			●	●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및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14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별지 서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청서, 의견서, 의결서, 조치계획 보다는 위원 기파·회피 신청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내용

-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내용)은 크게 위원 전문분야와 자격조건, 인원, 임기, 선출방식, 위원장 선정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
-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한 경우가 많음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 회의 개의와 찬성 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회의록 내용, 녹음 또는 녹화 가능 여부

- (전문분야) 시행령과 동일하나 춘천, 시흥, 부여는 디자인 등으로 전문분야 확대
 - 위원의 전문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 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광역 4개, 기초 9개, 총 13개 지자체가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개 지자체는 조례나 규정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다만, 춘천, 시흥, 부여는 심의위원회에 디자인 분야를 추가한 것이 특징임
 - 춘천의 경우는 이 외에 문화, 경관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포함
 - 향후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시행령에서 제시된 분야 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필요시 별도의 전문(자문)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 필요

[표 3-8]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

구분		현황		비고
건축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광역] 서울, 부산,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청주, 부여, 광주서구, 시흥, 아산, 의성, 춘천, 평택, 홍성	광역 4개소 기초 9개소	시행령과 동일
도시		[광역] 서울, 부산,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청주, 부여, 광주서구, 시흥, 아산, 의성, 춘천, 평택, 홍성	광역 4개소 기초 9개소	시행령과 동일
조경		[광역] 서울, 부산,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청주, 부여, 광주서구, 시흥, 아산, 의성, 춘천, 평택, 홍성	광역 4개소 기초 9개소	시행령과 동일
시행령 외 분야	디자인	[기초] 부여, 시흥, 춘천	기초 3개소	규정 내 신설
	그 밖의 분야	[기초] 춘천(문화, 경관)	기초 1개소	규정 내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l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위원의 자격기준) 공공건축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은 크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되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 (지자체 내부위원 자격기준) 공무원, 시의원, 타 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분되며 일부 지자체는 당연직 내부위원을 운영 중
 - 공무원은 5급 이상이 가장 일반적인 직급 기준이며, 4급으로 상향하거나 6급으로 낮은 지자체도 있음. 건축분야로 한정하거나 더 좁게 공공건축 분야로 한정할 경우(시흥)도 있음
 - 부산, 청주, 춘천은 시의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
 - 경북, 부여, 아산, 영천, 홍성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아산과 영천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당연직 내부위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교육청, 광주 서구, 서산, 시흥 4개소
- (지자체 외부위원 자격기준)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건축사, 기술사, 교수, 연구기관, 학위와 경력 등으로 구분되며 14개 지자체는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확대
 - 충남, 광명, 의성, 청주, 춘천은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
 - 건축사와 기술사 경력 기준은 5년 이상이 다수이고, 교수의 경우 조교수급 이상이 부교수급 보다 더 많음. 지자체별로 경력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남
 - 서울은 타 지자체와 달리 학위와 경력, 공공건축 관련 경력, 역량있는 건축사, 건축상 수상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 특히 관련 분야 박사 또는 석사, 학사 학위자 및 그와 관련된 경력 기준은 서울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1.7.)’ 제12조 사전검토 전문가의 자격을 인용함

[표 3-9]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내부 위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관련 실국장	[광역] 충남, 서울시 교육청(당연직)	2	
		4급 이상	건축 분야	[광역] 경북, [기초] 부여, 아산	3
			미규정	[광역] 부산	1
		5급 이상	건축 분야	[기초] 구미	1
			건축 분야 (3년 이상 재직자)	[기초] 부여, 아산	2
			건축 분야 (5년 이상 재직자)	[광역] 경북	1
			건축, 도시, 조경분야	[기초] 광주 서구(당연직), 서산(당연직), 영천, 이천, 청주	5
		6급 이상	공공건축 기획, 설계, 공사 담당	[기초] 시흥(당연직)	1
			건축분야	[기초] 춘천	1
		시장 임명 공무원		[기초] 춘천	1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광역] 경북, [기초] 부여, 아산, 영천, 홍성	4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기초] 아산, 영천	2	
	시의원		[광역] 부산, [기초] 청주, 춘천	3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광역] 충남, [기초] 광명, 의성, 청주, 춘천	5		
외부 위원	건축사	경력기준 없음	[광역] 충남, 경북, [기초] 의성	3	
		역량있는 건축사	[광역] 서울	1	
		5년 이상 경력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아산, 이천, 영천, 청주, 평택, 홍성	10	
		10년 이상 경력	[기초] 구미	1	
	기술사	경력기준 없음	[광역] 서울, 충남, 경북, [기초] 이천	4	
		5년 이상 경력	[기초] 광명, 구미, 부여, 서산, 아산, 영천, 청주, 평택, 홍성	9	
	교수	조교수급 이상	[광역] 경북, [기초] 광명, 부여, 서산, 아산, 영천, 평택, 홍성	8	
		부교수급 이상	[광역] 서울, 충남, [기초] 광주 서구, 구미, 이천, 청주	6	
	관련 연구기관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상당하는 직	[광역] 서울, 충남	2	
	학위기준	박사 (3년 이상 경력)	[광역] 서울	1	
		석사 (9년 이상 경력)	[광역] 서울	1	
		학사 (12년 이상 경력)	[광역] 서울	1	
	기타	공공건축 관련 10년 이상의 경력	[광역] 서울	1	
		최근 10년간 해당 지자체 건축상 수상자	[광역] 서울	1	
		건축분야 공무원	[기초] 홍성	1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광역] 경북, 충남 [기초] 광명, 청주, 부여, 광주 서구, 구미, 서산, 아산, 영천, 이천, 춘천, 평택, 홍성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인원, 비율, 임기, 선출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시행령에 연임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인원의 임기 규정은 모호함
- (인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인원은 최대 15명 정도로 나타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5명 이상으로만 명시한 서울과 부산은 최대 인원제한은 없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최대 인원을 규정. 10명 이내 지자체가 7개이고 15명 이내 지자체는 7개임. 홍성과 아산은 최소, 최대 인원을 명시
 - 심의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해 심의안전별로 심의위원회 명단을 구성하는 곳으로 서울이 있음. 풀(pool)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나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
- (구성 비율) 시행령의 성별 균형 고려를 반영하여 특정 성별을 6/10이하로 명시한 지자체가 8개로 나타남. 의성과 부여는 여성위원 수를 특정하고 있음

[표 3-10]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인원 및 비율, 임기, 선출방식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인원	5명 이상 (시행령 기준)	[광역] 서울, 부산	2
	6명	[기초] 의성(필요시 증가 가능)	1
	5명 이상 - 7명 이내	[기초] 광주 서구	1
	5명 이상 - 10명 이내	[광역] 제주, [기초] 이천, 부여, 서산, 영천, 춘천, 평택	7
	5명 이상 - 13명 이내	[광역] 서울시 교육청	1
	5명 이상 - 15명 이내	[광역] 충남, 경북, [기초] 광명, 청주, 시흥	5
	10명 이상 - 15명 이내	[기초] 홍성	1
	12명 이상 - 15명 이하	[기초] 아산	1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비율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과반수 구성 (시행령 기준)	[광역] 서울,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이천, 부여, 아산, 의성, 평택, 홍성	9
	특정 성별 6/10 이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관련)	[광역] 충남,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시흥, 평택, 홍성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광명, 서산, 시흥)	8
	성별균형 고려 (시행령 기준)	[기초] 아산	1
	여성위원 1명	[기초] 의성	1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 1인	[기초] 부여	1
임기	2년	[광역] 서울, 충남,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주 서구, 부여, 부산, 구미, 시흥, 청주	11
	3년	[광역] 경북 [기초] 광명, 서산,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춘천, 평택, 홍성	10
	(공무원)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광역] 경북, [기초] 구미	2
	(공공건축가)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기초] 청주	1
	1회 연임 가능	[광역] 부산, 경북, 충남,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청주, 평택, 홍성	17
	2회 연임 가능	[광역] 서울	1
	보궐 임기 (위원 사임 시 신규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광역] 부산, 경북, 충남,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청주	12
위원 선출 방식	기관장 위촉 (임명)	[광역] 부산, [기초] 광명, 시흥, 의성, 이천	5
	공개모집	[기초]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아산, 청주, 평택, 홍성	7
	관계기관 추천	[광역] 경북,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아산, 영천, 청주, 평택, 홍성	10
	관련부서 추천	[광역] 경북, [기초] 구미, 아산, 영천, 청주, 평택, 홍성	7
	해당(산하)기관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	[광역] 서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임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 11개소, 3년이 10개소로 나타남. 17개 지자체가 1회 연임가능을 명시하고 있어 위원 임기는 총 4년이나 6년이 가능함. 시행령에서는 연임 가능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3년 이내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

- 경북과 구미는 공무원의 임기를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는 공공건축가인 위원의 임기도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정
- 보궐임기를 명확한 명시한 지자체는 12개로 나타남
- (위원 선출방식) 지자체별로 위원 선출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지자체장이 직접 위촉(임명)하거나 공개모집, 관계기관 추천, 관계부서 추천 후 위촉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관계기관 추천이 10개로 가장 많고, 공개모집 7개, 관련부서 추천 7개로 나타남. 기관장이 직접 위촉(임명)하는 경우는 5개로 나타남
 - 서울은 해당(산하)기관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위원장 선출방식) 위원장은 임명, 당연직(총괄건축가 또는 내부직원), 호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
 - 충남과 영천은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임명
 -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지자체는 15개로 가장 많음. 담당부서 국장급이 9개, 부지자체장이 1개, 총괄건축가는 5개(부여, 구미, 청주, 춘천, 홍성)로 나타남
 - 이천과 의성은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간사, 서기 등을 두도록 명시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부위원장 선출방식은 호선이 10개소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부위원장도 국장이나 과장을 당연직으로 지명하는 지자체가 5개이며 지자체장 임명(영천), 위원장 임명(청주)으로도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당연직 내부 공무원으로 지명하는 경우도 5개(부산, 경북, 광명, 서산, 평택)가 있음
 - 청주의 경우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남. 총괄건축가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표 3-11]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위원장	부지자체장	[기초] 서산	1
	담당부서 국장급	[광역] 서울, 부산, 경북,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광주 서구, 시흥, 아산, 평택	9
	총괄건축가 (민간전문가)	[기초] 부여, 구미, 청주, 춘천, 홍성	5
	지자체장 임명	[광역] 충남, [기초] 영천	2
	호선 (위원회에서 선출)	[기초] 이천, 의성	2
부위원장	담당부서 국장급	[기초] 서산	1
	담당부서 과장급	[광역] 부산, 경북, [기초] 광명, 평택	4
	지자체장 임명	[기초] 영천	1
	위원장 지명	[기초] 청주	1
	호선 (위원 중 선출)	[광역] 충남,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시흥, 아산, 이천, 춘천, 홍성	10
간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장	[기초] 청주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팀장	[광역] 서울, 부산, 경북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춘천, 평택, 홍성	13
서기	총괄건축가 업무 담당 팀장	[기초] 청주	1
	담당자	[광역] 서울, 부산, [기초] 의성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r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내용

- 심의 진행 방식을 정기 개최 여부, 개의 및 의결 방법, 서면심의 가능 여부, 심의 절차의 구체성, 소위원회 활용, 심의 공개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
- (심의 개최 방식) 대부분의 지자체 위원회는 부정기적으로 개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충남, 의성 4개소임

[표 3-1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방식

구분	내용		현황	기관수
개최 주기	정례화	월 1회	[광역] 부산, 충남(월 2회 가능), [기초] 의성	3
		월 2회	[광역] 서울	1
	부정기	사업부서 요구 시	[광역] 경북,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3
		위원장이 필요시	[광역] 경북, 충남,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8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광역] 전북	1
		수시 가능 (위원장 인정 시)	[광역] 부산, [기초] 의성	2
개의 및 의결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행령 기준)		[광역] 서울, 부산, 충남,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춘천, 평택, 홍성	16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행령 기준)		[광역] 서울, 부산, 충남, 제주,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춘천, 평택, 홍성	16
	가부동수 시 의결 : 위원장 결정		[광역] 부산	1
	서면심의 가능 여부		[광역] 서울, 부산,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4
심의절차	심의 절차 규정		[광역] 서울, 부산, 충남, [기초]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시흥, 의성	8
	심의 기간 규정		[광역] 서울, 부산, 충남, [기초] 광주 서구, 부여, 의성, 이천	7
	제출도서와 양식 규정		[광역] 서울, 부산, 충남	3
	심의 내용 규정		[광역] 충남	1
	심의 횟수 규정		[광역] 서울(3회 이내 처리)	1
	재심의 신청 조건 규정		[광역] 부산	1
	보완 절차 규정		[광역] 서울	1
	이의신청 절차와 대상 규정		[광역] 서울	1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광역] 서울, 충남, 전북	3
	소위원회 운영		[광역] 서울시 교육청, [기초] 시흥	2
심의공개 (시행령 기준)	비공개		[광역] 서울, [기초]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아산, 평택, 홍성	7
	회의록 작성 규정		[광역] 서울, [기초]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시흥, 아산, 의성, 평택, 홍성	9
	녹음 또는 녹화		[광역] 서울, [기초] 부여, 서산, 시흥, 아산, 평택, 홍성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서울은 월 2회 개최, 부산, 충남, 의성은 월 1회 개최. 충남은 월 2회까지 가능하도록 명시
- 부정기 개최의 경우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거나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경우로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임
- 16개 지자체가 위원회 개의와 의결 조건을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만이 유일하게 가부동수 시의 의결은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명시
- 14개 지자체가 서면심의로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 가능하도록 규정
- (심의 절차)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으며 서울, 부산, 충남이 상대적으로 구체화하여 운영 중
 - 심의 절차를 명시한 지자체는 8개이며, 심의 기간을 규정한 지자체는 7개
 - 제출도서와 양식을 규정한 지자체는 3개. 충남의 경우는 심의 내용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은 보완 절차, 이의신청 절차와 대상 등을 규정하기도 함
- (소위원회)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지자체는 5개로 서울, 충남, 전북은 분과위원회로, 서울시 교육청과 시흥은 소위원회로 운영
- (심의 공개 및 회의록) 심의 공개 여부와 녹음 또는 녹화 등을 규정한 지자체는 7개이며, 회의록 작성 규정을 명시한 지자체는 9개이나 시행령 기준과 동일
- (심의위원 제척기준) 위원회 운영 시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상충되는 기준이 있음
 - 15개 지자체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위원은 심의 시 제척하고 있음
 - 심의대상 사업에 자문을 수행한 경우 심의위원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2개(충남, 광명)이나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의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상충됨

[표 3-13]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제척	건축기획 수행 (시행령 기준)	[광역] 서울, 부산, 경북,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평택, 홍성	15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수행	[광역] 충남, [기초] 광명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광역] 경북, 충남,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1
	위원이 <u>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광역] 경북, 충남,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0
	심사대상 사업 시행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광역] 충남,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1
	위원이나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대리 포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 경북, [기초] 광명,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0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우	[광역] 경북,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0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수행한 경우	[광역] 경북,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0
	지자체장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광역] 경북 [기초]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9
기피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광역] 부산, 경북, 충남,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3
회피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 서울, 부산, 경북, 충남, 서울시 교육청,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15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타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		[광역] 제주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rList>) (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심의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인 심의대상 업체와의 관계를 제척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향후 삭제 필요(지자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용에 따른 문제로 판단)

- ex)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ex)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건축기획 업무 수행 주체나 법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심의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도록 조정할 필요
- 제주도는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타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
- (심의위원회 배석자(의견 청취)) 대부분 필요시 사업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청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울, 제주는 이해관계자, 충남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담당자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심의위원회 배석 가능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표 3-14]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등 관련 내용

구분		현황	기관수
현장조사		[광역] 부산, 경북, 충남, 전북, 제주,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7
의견 청취	관계 공무원	[광역] 경북, 충남, 서울시 교육청, 전북, 제주,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8
	관계 전문가	[광역] 경북, 충남, 서울시 교육청, 전북, 제주,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8
기술 검토 의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광역] 경북,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자문) 의결 방식) 원안, 조건부, 재심의가 일반적인 의결 방식. 의결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으나 22개 지자체 중 18개가 의결방식을 ‘원안-조건부-재심의’ 3개의 방식으로 진행
 - 지자체에 따라 수정, 조건부(보고), 부결(반려), 보류의 방식을 추가적으로 활용

- 서울은 의결방식이 원안, 조건부, 조건부(보고), 재심의, 부결, 반려 6개로 구분되어 매우 상세하게 의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문의결 방식을 명시한 지자체는 8개로 ‘검토적용-보완-재검토’의 형식으로 자문 사항에 대한 의결을 결정

[표 3-15]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방식

구분		현황	기관수
심의 의결 방식	원안 (동의, 의결)	[광역] 서울, 부산, 경북, 충남,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8
	수정	[기초] 의성	1
	조건부 (동의, 의결)	[광역] 서울, 부산, 경북, 충남,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8
	조건부(보고)	[광역] 서울	1
	재심의 (보류)	[광역] 서울, 부산, 경북, 충남,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의성(보류),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8
	부결 (반려)	[광역] 서울, 부산, 충남, [기초] 의성	4
	보류	[광역] 서울	1
심의결과와 조치	조치계획 제출	[광역] 부산,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서산, 시흥	6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출	[기초] 청주	1
	지도·점검	[광역] 부산	1
자문 의결 방식	검토적용, 보완, 재검토	[광역] 경북, [기초]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평택, 홍성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의견 종합정리 및 전달 방식) 대부분 심의의견서 작성 및 전달과 관련해서는 조례, 운영규정 등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심의의견서를 심의위원 각각 작성하는 양식만 포함하여 종합의견서 형식으로 정리되어 사업부서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 경우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의견으로 정리되어 전달되기 어려우며, 일부 위원 간 상반된 의견 기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의견서 작성 및 전달 방식에 대해 논의 필요

- (심의의견 조치결과 등 후속 조치) 심의의견 종합정리 및 전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심의의견 조치결과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조례, 운영규정 등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지자체는 6개이며, 청주의 경우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주요 내용

- (심의대상)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 충남,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공공건축 사업의 재원 유형(보조금, 국비, 도비)을 명시해 일부 구체화

[표 3-16]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령 상의 심의대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지자체 운영규정 내의 심의대상	기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부산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모하는 국비 또는 도비 재정사업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충남
	이 규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사업 2. 리모델링 사업 3. 대수선 사업	서울시 교육청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부산은 시행령의 심의대상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

축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명시

- 서울시 교육청은 심의대상 사업을 건축행위 유형(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으로 구체화
- 충남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모하는 국비 또는 도비 재정사업으로 심의대상을 구체화.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
- 일부 광역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광역-기초 지자체 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논의 필요
- (자문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기능은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개가 포함하여 운영 중이나, 일부 지자체는 자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자문대상) 정책·계획·제도, 공공건축사업과 건축서비스산업, 건축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 및 시공, 평가로 구분 가능
 - 광역지자체는 정책, 계획,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내용으로 규정
 - 충남의 경우 심의대상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심의와 자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
- 설계공모와 관련된 자문 대상(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10개 지자체가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설계공모지침서 적정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음
- 경북은 설계 및 시공, 평가, 공사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명시

[표 3-17]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대상

구분	자문 내용	현황	기관수
정책, 계획, 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와 관련된 사항	[광역] 서울(조례), 경남(조례), 전북(조례)	3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광역] 충남(조례)	1
	성별·연령·계층에 따른 공간 이용방식 등 적절한 공간환경 계획 여부에 관한 사항	[광역] 충남(조례)	1
공공건축사업, 건축서비스산업	공공건축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광역] 서울(조례), 경남(조례), 전북(조례)	3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령 기준)	[광역] 부산(세칙), 충남(조례), 서울시 교육청(규칙), [기초] 광명,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청주, 춘천, 평택, 홍성	16
	공공건축사업 추진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기초] 부여, 서산, 아산, 평택	4
건축기획	공공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광역] 충남(조례)	1
사전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광역] 충남(조례)	1
설계공모	설계지침서 적정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광역] 충남(조례), [기초] 부여,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청주, 춘천, 평택	9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광역] 경북(규정),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청주, 평택	10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광역] 경북(규정), [기초] 구미,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춘천, 평택	8
설계 및 시공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광역] 경북(규정)	1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초] 광주 서구, 부여, 구미, 서산, 시흥, 아산, 영천, 이천, 춘천, 평택	10
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광역] 경북(규정)	1
공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광역] 경북(규정)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query=%EA%B1%B4%EC%B6%95%EC%84%9C%EB%B9%84%EC%8A%A4#AJAX (검색일: 2022.2.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main/totSrclList(검색일: 2022.5.16.)) 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의성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4.23.)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다만, 자문 기능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논의 필요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독립(별도) 운영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업의 사전검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기능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건축기본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이하 생략)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등)

- ① 총괄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5.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자문

(이하 생략)

- ②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중략)

4. 그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현황

- 2개 중앙행정기관과 11개 공공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¹⁵⁾
- 운영규정 형식은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방침으로 구분이 가능
 - 훈령, 예규, 지침으로 규정한 기관은 각 1개, 규정 5개, 방침 5개 기관으로 나타남
 - (훈령) 조달청,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지침) 인천항만공사, (규정) 한국폴리텍대학,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방침)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표 3-18]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제정일자 순으로 정리)

구분	명칭	형식	제정일자
한국전력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서	방침	2020.03.03
한국폴리텍대학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규정	2020.04.24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요강	방침	2020.04.29
국가철도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규정	2020.05.14
인천항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지침	지침	2020.05.1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방침	2020.06.12
대한체육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규정	규정	2020.07.2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규정	2021.01.06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방침	2021.03.01
울산과학기술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2021.03.09
우정사업조달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2021.04.20
조달청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2021.07.27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방침	202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규정과 지침 외에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된 기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 특성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과 형식은 기초지자체의 운영규정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방침으로 규정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형식은 조항과 조문으로 구성
- 지자체의 운영규정과 달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별지 서식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것이 공공기관 운영규정의 특성

[표 3-19]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운영규정의 구성과 내용

구분	예규·훈령		규정·지침						방침				
	우정 조달 센터	조달 청	폴리 텍 대학	국가 철도 공단	인천 항만 공사	대한 체육 회	부산 대 병원	울산 과기 원	전력 공사	자산 관리 공사	수자 원 공사	농어 촌 공사	토지 주택 공사
목적	1	1	1	1	1	1	1	1	●	1		1	1
적용범위	1	1		1	1		1		●	1		1	
정의	1	1	1	1	1		1		●	1		1	
기능 (설치)	1	1	1	1	1	2	1	1	●	1	●	1	1
구성 (자격)	2	3	3	1	3	2	1	1	●	1	●	2	1
임기		1	1	1		1				1			1
위원장(심의위원) 직무			1	1		1				2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심의위원의 의무				1		1						1	
심의신청 등					1								1
회의 (운영)	1	1	1	2	2	2	2	1	●	2	●	3	1
심의주관부서의 임무				1									
민간전문가의 자문				1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1	1	1	2		2	1			1	●	2	
심의(자문) 의결 (기준)	1	1	1	1	1	1	1			1	●		1
결과 조치 (처리 기간)	1	1	1				1						1
재검토 기한		1											1
간사 및 서기								1					
의견 청취										1			
비밀유지													1
수당 및 여비	1	1	1	1	1	1	1	1		1	●	1	1
기록의 보존 및 관리										1			

구분	예규 훈령		규정 지침						방침				
	우정 조달 센터	조달 청	폴리 텍 대학	국가 철도 공단	인천 항만 공사	대한 체육 회	부산 대 병원	울산 과기 원	전력 공사	자산 관리 공사	수자 원 공사	농어 촌 공사	토지 주택 공사
적용 (준용)						1							
운영 세칙	1	1	1		2		1	1		1		1	1
규정의 총 조항	12	15	14	16	14	16	12	7		16		14	12
별 지	청렴서약서	●	●		●		●		●	●	●	●	●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		●		●					●	●
	제척사유 해당확인서		●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								
	사전검토 반영여부 및 조치사항표	●											
	신청서				●							●	●
	신청 세부자료								●				●
	개최통지서												●
	심의안건												●
	심의평가표	●(2)											
	자문 및 심의 결과서										●		●
	자문 의견서									●			
	심의 의견서	●(2)	●		●		●		●	●	●	●	●
	평가 사유서										●		
	집계표	●(2)							●				
	심의 의결서	●(2)	●		●(2)		●			●	●	●	●
	참석위원 서명록				●								
	재심의사유서		●				●						
	지적사항		●				●						
	심의(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		●		●				●		●
	회의록		●		●		●		●	●	●	●	
	위원 기파 회피 신청서				●								

* (2)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별지 서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주로 활용하는 신청서, 의견서, 의결서, 조치계획 양식 외에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제척사유 해당 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내용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내용)은 기초지자체의 규정과 동일하며, 위원 전문분야와 자격조건, 인원, 임기, 위원 및 위원장 선출방식으로 구분이 가능
- (전문분야) 시행령과 동일하게 건축, 도시, 조경 분야로 한정
 - 다만, 조달청은 주관부서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의 경우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표 3-20]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

구분		현황	기관수
건축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3
도시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2
조경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2
그밖의 분야	주관부서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	조달청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위원의 자격기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크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되며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내부위원 자격기준) 기관 소속 전문가(임직원)와 자문위원 중

심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내부위원을 운영 중인 기관도 있음

- 기관별로 직급기준이 다른데 인천항만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급 이상, 한국수자원공사는 4급 이상, 우정조달센터는 5급 이상으로 명시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급 기준 없이 임직원이나 실무경험만으로도 위원 위촉이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외부위원 자격기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다양함. 민간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교수, 연구기관, 학위 기준 등 지자체의 자격기준 외에 건설 관련 단체 및 투자기관, 공무원 등이 추가되어 자격기준이 확대
 -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일하게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심위원으로 활용
 - 지자체와 달리 건축사와 기술사의 경력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관이 다수이며 5년 이상이 경력기준의 최대
 - 교수의 자격기준은 조교수급 이상이 다수이며, 부교수급 이상으로 기준을 둔 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 유일
 - 연구원 자격기준을 명시한 기관은 4개이며,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등 직급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 건설 관련 단체 및 투자기관의 임직원을 외부위원 자격기준으로 명시한 기관은 3개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국가철도공단
 - 행정기관의 기술직 공무원을 외부위원 자격기준으로 명시한 기관은 전체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으로 비율이 높음
 - 학위 기준의 경우 박사와 석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달리 박사의 경력기준이 없거나 석사 후 경력기준이 5년으로 하향한 기관도 있음
 - 위탁기관 또는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사람(한국자산관리공사), 다른 발주청의 공공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인천항만공사) 등 자격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음

[표 3-21]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구분		기준		현황	기관 수
내부 위원	기관소속 전문가	2급 이상	공사 내 2급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인천항만공사	1
			공사 2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건축사, 기술사 소지자거나 대상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1
		4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	한국수자원공사	1
		5급 이상	근속 20년 이상, 시설택	우정조달센터	1
		부장 직위 이상의 임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
		법인 및 소속기관(캠퍼스 등)의 부서장 이상인 사람		한국폴리텍대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1
	기술자문위원			국가철도공단	1
	「공공개발 자문위원 운영요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1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요강」 제5조에 따라 임명 위촉된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1
	공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1
	당연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시설관리팀장)	1
	외부 위원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한국수자원공사
건축사		경력기준 없음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 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 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폴리텍 대학	7
		위촉 대상 분야 관련 경력 보유자		조달청	1
		5년 이상 경력		우정조달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술사		경력기준 없음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 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폴리텍대학	8
		5년 이상 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	1
교수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		국가철도공단	1
		건축계획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		우정조달센터	1
		위촉 대상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7
		위촉 대상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
		연구기관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및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중 공통자격기준 부합자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기준	현황	기관 수
건설관련 단체 및 투자기관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인천항만공사	1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인천항만공사	1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및 2급 이상 직원 중 공통자격기준 부합자	한국수자원공사	1
	건설관련업체 설계·시공사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중 공통자격기준 부합자	한국수자원공사	1
	관련분야 단체의 임원 및 처장급 이상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1
공무원	관련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2
	건축 및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위촉 대상 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	조달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폴리텍대학	3
	건축, 도시, 조경 및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1
	사업대상지 건축행정 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 공공개발 목적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공무원 중 공통자격기준 부합자	한국수자원공사	1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농어촌공사	1
	박사 (3년 이상 경력)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5
	석사 (9년 이상 경력)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2
	석사 (5년 이상 경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폴리텍대학	2
기타	건축분야 공공기관, 건설관계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 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1
	사업계획 등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수요기관에서 추천을 한 사람	한국자산관리공사	1
	다른 발주청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인천항만공사	1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3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인원)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시행령과 동일하게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기관이 다수
 - 한국전력공사는 인원수를 5명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 9명~11명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한 기관이 4개 기관이고 인천항만공사는 40명 이내로 제한
 - 공공기관은 심의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해 심의안전별로 심의위원회 명단을 구성하는 기관이 다수로 확인됨
- (구성 비율) 특정 성별을 6/10이하로 명시한 지자체가 8개인데 반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성별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동일하게 성별 균형만을 고려함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성별 비율보다 내부와 외부 비율 명시가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남.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한 기관이 4개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위원의 비율을 30~50%로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
 - 조달청은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3인 이상, 도시계획 및 조경 1인 이상으로 분야별 인원수를 특정하고 있음
- (임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 1개, 2년이 5개, 3년이 4개로 나타남. 5개 기관이 1회 연임가능을 명시하고 있고 2회 연임가능한 기관은 1개로 시행령에서 공무원 외 위원 임기를 3년 이내로만 명시하고 연임 가능 여부를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 특히 공무원이라고만 기재되어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해석 필요
 - 조달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원의 임기가 한시적임을 ‘자문, 심의 요청 발생 후 구성하여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라고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있음. 우정조달센터는 일회성 위촉이 가능함을 명시
 - 보궐임기를 명확한 명시한 기관은 3개로 나타남

- (위원 선출방식) 위원 선출방식은 지자체보다 다양한데, 기관장이 직접 위촉(임명)하거나 공개모집, 관계기관 추천, 관계부서 추천 후 위촉하는 방식 등은 지자체와 동일. 지자체와 다른 점은 기관장이 아닌 사업부서장이나 주관부서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것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직접 위촉(임명)하는 방식이 공개모집, 관계기관장의 추천, 부서별 추천에 비해 많아 지자체가 관계기관 추천이나 공개모집, 관련부서 추천 방식이 다수인 것과 차이가 있음
 - 우정조달센터는 심의위원 선정 절차를 사업부서, 선정부서로 구분하여 부서별 역할을 자세하게 명기

[표 3-22]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인원 및 비율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인원	5명	한국전력공사	1
	5명 이상 (시행령 기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7
	5명 이상 - 9명 이내	우정조달센터	1
	5명 이상 - 10명 이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
	5명 이상 - 11명 이내	대한체육회	1
	5명 이상 - 40명 이내	인천항만공사	1
비율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과반수 구성 (시행령 기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1
	외부위원 과반수	우정조달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
	내부위원 (30%—50%)	한국자산관리공사	1
	심의대상사업 관련 공무원은 참여 불가	한국농어촌공사	1
	성별균형 고려 (시행령 기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3인이상	조달청	1
	도시계획 1인 이상	조달청	1
	조경 1인 이상	조달청	1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분야 1인 이상	조달청	1
임기	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1
	2년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인천항만공사	5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3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4
	3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조달청	1
	자문, 심의 요청 발생 후 구성하여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
	1회 연임 가능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5
	2회 연임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외부위원만)	1
	보궐 임기 (위원 사임 시 신규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
	일시 위촉 가능	우정조달센터	1
위원 선출 방식	기관장 위촉 (임명)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폴리텍대학	3
	공개모집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
	관계기관 장의 추천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위원장 임명 혹은 위촉)	2
	부서별 추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위원장 임명 혹은 위촉)	2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위촉(임명)	인천항만공사	1
	사업부서장 위촉 (임명)	우정조달센터	1
	주관부서장 위촉 (임명)	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장)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위원장 선출방식) 위원장은 임명, 내부 당연직, 호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되나 내부 당연직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음
 - 13개 기관 중 내부의 특정 부서장이 하는 경우가 5개이고 심의부서장이 위원장을 하는 기관은 2개로, 총 7개 기관이 내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기관장 임명이 2개 기관, 호선이 3개 기관이며 외부위원 중 선출하는 것으로 명시한 기관은 우정조달센터가 유일
-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간사, 서기 등을 두도록 명시하는 기관들이 있으며 부위원장 임명방식을 명시한 기관은 2개 기관으로 모두 위원장이 임명함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13개 기관 중 2개 기관만 부위원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에 비해 적음

[표 3-2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구분	기준	현황	기관수
위원장	외부위원 (호선 또는 추천)	우정조달센터	1
	호선	조달청, 국가철도공단, 한국폴리텍대학	3
	심의부서장	한국수자원공사(평가 미참여), 인천항만공사	2
	기관장 임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체육회	2
	내부 당연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기획실장), 울산과학기술원(내부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건축분야 총괄 본사부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건설부점장, 의결권 없음), 한국전력공사(사옥건설처 사옥설계실장)	5
부위원장	위원장 지명	대한체육회(2명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2
간사	운영지침 관리부서장(설계과장)	우정조달센터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과학기술원	2
	기관장 지명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
	위원장 지명	한국농어촌공사	1
	심의부서 실무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내용

- 심의운영 방식을 정기 개최 여부, 개의 및 의결 방법, 서면심의 가능 여부, 심의 절차의 구체성, 소위원회 활용, 심의 공개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
- (심의 개최 방식)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위원회를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월 1회 개최
 - 부정기 개최의 경우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거나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경우로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
- 지자체와 달리 심의 참여주체를 사업부서, 심의주관부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와 다른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13개 기관 중 4개가 서면심의로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 가능하도록 규정

[표 3-2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방식

구분	내용		현황	기관 수
개최 주기	정례화	월 1회	한국농어촌공사	1
	부정기	사업부서장 요구 시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4
		위원장이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기관장 필요시	대한체육회	1
심의 참여주체의 규정	심의위원 선정부서		우정조달센터	1
	사업부서 (시행부서)		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3
	심의 주관(운영)부서		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
개의 및 의결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행령 기준)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2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행령 기준)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2
	가부동수 시 의결 : 위원장 결정		국가철도공단, 울산과학기술원	2
	서면심의 가능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4
심의절차	심의 절차 규정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8
	심의 기간 규정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폴리텍대학	5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대한체육회	1
심의공개 (시행령 기준)	비공개		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8
	회의록 작성 규정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9
	녹음 또는 녹화		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울산과학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절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지자체에 비해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의절차를 명시한 기관은 13개 기관 중 8개이며 심의 기간을 규정한 기관은 5개
 - 지자체와 달리 제출도서와 양식을 운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별지 양식을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기관은 대한체육회 1개 기관
- (심의 공개 및 회의록)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게 심의 공개 여부를 규정한 기관은 8개, 녹음 또는 녹화 등을 규정한 기관은 7개이며 회의록 작성 규정을 명시한 기관은 9개
- (심의위원 제척기준) 위원회 운영 시 위원 제척·회피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상충되는 기준이 있음
 - 13개 기관 중 8개 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위원은 심의 시 제척하고 있음
 - 심의대상 사업에 자문을 수행한 경우 심의위원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5개(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대한체육회)이나 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의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상충됨
- 지자체의 규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건축심의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인 심의대상 업체와의 관계를 제척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삭제 필요
- 건축기획 업무 수행 주체나 법인과 관계를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심의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도록 조정할 필요

[표 3-25]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파·회피 기준

구분	기준	현황	비고
제척	건축기획 수행 (시행령 기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체육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8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수행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4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이나 자문 역할 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대한체육회	1
	위원이 현재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업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건축기획 업무(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 등)를 수행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건축기획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대한체육회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인천항만공사	1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
	안건 대상인 공공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1
	위원이나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대리 포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 한 경우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수행한 경우	인천항만공사	1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인천항만공사	4
기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1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체육회,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6
제척기파회피 조항 미규정		우정조달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위원회 배석자(의견 청취)) 지자체에 비해 필요시 사업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의 참석을 요청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적음
 - 공공건축심의의 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개 기관이 유일함. 지자체의 경우 22개 중 17개가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음

[표 3-26]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등 관련 내용

구분		현황	기관수
현장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
의견 청취	관계 직원(공무원)	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
	관계 전문가	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
	이해관계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
기술 검토 의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자문) 의결 방식)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도 지자체와 동일하게 원안, 조건부, 재심의가 일반적인 의결 방식. 의결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으나 13개 기관 중 10개가 의결방식을 ‘원안-조건부-재심의’ 3개의 방식으로 진행
 - 우정조달센터는 재심의 대신 ‘부적정’이란 의결 방식을 활용
 - 한국전력공사는 적합과 부적합 2가지 방식으로 의결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
 - 자문기능을 운영규정 내에 특정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으며, 자문의결 방식을 명시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7]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방식

구분		현황	기관수
원안 채택(적정)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0
조건부 채택(적정)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폴리텍대학	10
부적정		우정조달센터	1
적합		한국전력공사	1
부적합		한국전력공사	1
재심의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폴리텍대학	9
기각		국가철도공단	1
결과의 조치	조치계획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1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보완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폴리텍대학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I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심의의견 조치결과 등 후속 조치) 심의의견 조치결과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등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필요
 -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공공기관은 13개 기관 중 1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일함
 - 다만, 우정조달센터,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폴리텍대학 5개 기관은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보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주요 내용

- (심의대상) 5개 기관이 심의대상을 시행령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조달청 수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대상을 확대
 - 우정조달센터는 지방우정청 소관사업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심의대상 사업을 건축행위 유형(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으로 구체화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건축공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탁사업 시 위탁기관(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기획·설계단계 업무 관련 자문 등에 대한 심의로 심의대상을 확대
 - 국가철도공단은 심의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심의가 가능

[표 3-28]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법령 상의 심의대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공공기관 운영규정 내의 심의대상	현황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규정은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사업 2. 리모델링 사업 3. 대수선 사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옥건설, 지역개발 건축분야 등 건축공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기획·설계단계 업무관련 자문 등에 대한 심의	조달청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국가철도공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 (자문대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기능은 13개 기관 중 6개가 포함하여 운영 중이나, 그 외의 자문 대상을 규정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기관에 불과함
 - 국가철도공단은 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을 확대하여 규정
- 13개 기관 모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역할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표 3-29]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대상

구분	자문 내용	현황	기관수
정책, 계획, 제도	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철도공단	1
공공건축사업, 건축서비스산업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우정조달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체육회,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6
건축기획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국가철도공단	1
	건축기획 내용에 대한 자문	한국자산관리공사	1
설계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국가철도공단	1
기타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국가철도공단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A%B3%B5%EA%B1%B4%EC%B6%95%EC%8B%AC%EC%9D%98(검색일: 2022.5.16.)) 및 기관 내부 자료 참고 후 연구진 작성

4. 소결

■ 운영규정 제정 및 내용 구성 관련 사항

- (저조한 운영규정 제정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률은 매우 저조하며, 위원회 독립(별도) 운영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 8개 광역지자체, 14개 기초지자체, 13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¹⁶⁾. 이 중 5개 광역지자체와 11개 기초지자체가 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독립(별도) 운영하는 서울, 부산, 충남, 경북, 서울시 교육청 5개 광역지자체는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 경북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없이 운영규정만을 제정
- (다양한 운영규정의 형식) 조례, 훈령, 예규, 규칙, 규정, 지침, 방침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기초지자체는 훈령이 주요 형식
 - 서울, 부산, 충남 3개 광역지자체는 조례와 운영규정(방침)을 모두 제정하였으며 경북은 훈령, 서울시 교육청은 규칙으로 제정. 14개의 기초지자체 중 10개는 훈령으로 광명, 부여, 평택은 조례로 운영규정을 제정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규정 형식은 훈령(1개), 예규(1개), 지침(1개), 규정(5개), 방침(5개)으로 구분이 가능
- (유사한 운영규정 구성과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8항에 따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들은 시행령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는 방식의 구성이 많아 기관과 관계없이 매우 유사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례 내에 운영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도 운영규정으로 보는 경우 광역지자체는 8개소이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례를 제외하면 광역지자체는 8개소가 아닌 5개소임

- 주요 내용은 기능, 설치,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심의 의결 방법(기준), 결과 조치 등으로 구분
- 기초지자체 별지에서는 신청서, 의견서, 의결서 양식보다 위원의 기피·회피 신청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별지 종류는 23종에 이릅니다

■ ①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관련 사항

[표 3-3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및 주체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13곳)	
운영 방식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 위원회를 둔다	독립(별도)운영 일부 공공기관은 타 위 원회 명단을 활용해 심의 개최 시 일화성 위촉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일화성 위촉 운영 지향 명시 필요 (일정기간 임기를 가진 인원으로 운 영 필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음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 중앙건축위원회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 : 지역건축위원회, 지방 건축위원회	대행 운영	- (내용없음)	(내용없음) -	대행 가능위원회 추가 검토 필요 대행 가능위원회 의 적정 여부에 대 한 연구 필요
	-	위탁 운영	-	-	심의대상 확대와 연계해 검토 필요
운영 주체	(내용없음)	운영부서(전담자) 유무 에 차이가 있음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개최 운영할 경우 셀프 심의 우려	(내용없음)	사업부서(시행 부서), 심의 주 관(운영부서), 심의위원 선정 부서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있음	일관되고 합리적 인 심의운영을 위 한 주체별(운영부 서, 관리부서, 사업 부서 등) 역할 정립 및 안내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법령에서 명시한 운영방식 외 세부규정은 없는 상황이나,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일부기관에서 기(既)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심의 개최 시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임기를 가진 인원으로 운영해야 함을 안내 필요
-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안내 필요)** 법령에서 명시한 운영주체 관련 내용은 없으나, 운영부서(전담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및 운영규정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와 심의를 직접 개최하고 운영하는 사업부서가 있어 일부 기관(우정조달센터,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농어촌공사, 조달청)의 운영규정에는 각각 구분하여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주체별 역할 정립과 안내 필요

■ ② 구성 관련 사항

- **(개의(開議) 기준에 적합한 인원 구성 유도 필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라는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경우 최대인원을 제한하는 곳이 22곳 중 16곳,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최대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가 13곳 중 8곳. 중요한 점은 최대인원 제한 여부가 아니라 개의기준을 함께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는 것임. 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이를 감안해 인원 구성을 하도록 재적위원 의미에 대해 안내 필요
- **(성별 비율은 지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반영 필요)** 법령의 성별 고려를 반영하여 8개 지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을 6/10이하로 명시함. 이를 준용해 법령 개정 및 각 기관별 운영규정에 반영 필요
- **(내부위원 비율은 개정령안 반영하여 현행화 필요)** 내부위원 비율은 현재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지자체 운영규정에는 부재함. 반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성별 비율보다 내·외부 비율이 구체적인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한 기관이 4개(우정조달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비율을 30~50% 이내로 규정. 다만, 개정령안에 전체 위원수의 30%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전반적인 개정 필요

- **(법령에 명시된 전문분야 외 구성 가능여부에 대한 조항 해석 필요)** 법령에서 제시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외 디자인, 문화, 경관 분야 전문가를 일부기관에서는 포함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분야를 포함하도록 해 전문분야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이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서 제시된 분야 외 구성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 안내 필요
 - 추후 필요 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전문분야 축소 혹은 확대에 대한 논의 진행되어야 함
- **(개정령안 시행 후(심의위원 자격기준 강화) 운영 실태 모니터링 필요)** 공공건축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은 매우 다양하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전반적인 개정 필요. 다만, 운영 규정 조사 결과 건축사 및 기술사 등 경력기준과 교수의 직급기준이 개정령안과 비교해 차이가 있었고,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내부직원의 경우 개정령안에 맞춰 경력기준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령안 시행 후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법령에 명시된 공무원 외 위원의 임기 규정에 대한 조항 해석 필요)** 공무원 외 위원에 공공기관 내부 직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연임을 포함한 총 임기인지 등 법령 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 제안 필요
-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고려한 심의위원 선출방식 검토 필요)** 법령 상 위원 및 위원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선출방식이 매우 다양하므로 각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다만, 심의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정령안에 외부위원 중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개정 필요하며, 선출방식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임명, 호선,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므로 심의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 필요

[표 3-3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13곳)	
인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고정인원제 혹은 풀(pool)제 활용	법령 내용 바탕으로 최대인원 제한하는 곳 다수	법령 내용 바 탕으로 최대인 원 제한하지 않는 곳 다수	최대 인원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개 의기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필 요
개의 기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구성 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 파행(跛行) 우려	법령 내용 동일	법령 내용 동일	재적위원에 대한 해석 필요
성별 비율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풀(pool)제 적용 기관 은 성별의 균형을 맞추 기 위해 각 성별로 순번 을 정해 적용하기도 함	특정성별 6/10이 하(양성평 등기본법) 규정 적용 기관 있음	법령 내용 동일	양성평등기본법 적용 필요. 필요시 개정 필요
내부 위원 비율	(내용없음) 개정령안 포함	한국전력공사는 내부 위원 100%로 구성해 운영하기도 함	(내용없음)	과반수 미만 은 30~50%로 구성하도록 함	개정령안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위원 활용 이 유인 제도 및 사업 에 대한 이해도 확 보에 문제는 없는 지 확인 필요
전문 분야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 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 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 수로 구성해야 한다	법령 유지 외 분야 축소(도시·조경 제외) 혹은 분야 확대 (전기·통신·소방 등 추 가)에 대한 의견 있음	법령 내용 동일 일부 디자 인, 문화, 경관 분야 포함한 기 관 있음	법령 내용 동일 조달청은 사업 특성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 한 분야 포함	법령 상 제시한 분 야 외 구성이 가능 함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시 개정 필요. 이후 분야 축소 혹 은 확대에 대한 논 의 진행 가능
자격 기준	(내용없음) 개정령안 포함	대부분 강화된 자격기 준이 적용된 개정령안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얘기함 다만, 내부직원은 경력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 울 수 있을 것으로 얘기	[내부] 일부 시의 원, 지방 건축위원 회 위원, 기술자문 위원회 위	[내부] 기관 내 위촉 한 자문위원 등 포함 [외부] 민간전문가,	개정령안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 상 문제 점은 없는지 확인 필요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13곳)	
		하기도 하고, 자격기준 이 강화되었다고 꼭 실 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 견을 주기도 함	원 등 포함 [외부] 민간전문 가 포함 * 건 축 사 및 기술사 는 5년이 상 경력기 준, 교수 는 조교수 급 이상이 일반적	건설관련 단체 및 투자기관, 공무원 등 포 함 *건축사 및 기 술사는 경력기 준 없음, 교수 는 조교수급 이상이 일반적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 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임기에 대한 해석 차이 가 있음	임기에 대 한 해석 다 양	임기에 대한 해석 다양	연임 규정 명시를 위한 개정 필요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해 석 및 개정 필요
위원 장 선출 방식	(내용없음) 개정령안 포함	호선 혹은 지정(외부위원 or 당연 직(내부위원)) 등 다양 함	담당부서 국장급 9 곳 / 총괄 건축가 5 곳 / 호선 2곳 / 지 자체장 임 명 2곳 등	당연직 내부위 원 5곳 / 호선 3곳 / 심의부 서장 혹은 기 관장 임명 2곳 등	개정령안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위원을 심의 위원장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필요
위원 선출 방식	(내용없음)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하 는 곳도 있으나, 일부 전문성 및 위상 확보를 위해 학협회 등 추천 등 을 하는 경우가 있음	관계기관 추천 10 곳 / 공개 모집 7곳 / 관련부 서 추천 7 곳 등	기관장 위촉 (임명) 3곳 / 공개모집, 관 계기관 장의 추천, 부서별 추천 각 2곳 등	공정성, 투명성 등 을 위해 공개모집 을 원칙으로 안내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③ 운영 관련 사항

- (법령 상 부재한 심의진행 관련 사항에 대한 운영가이드 마련 검토 필요) 법령에는 심의 절차, 개최주기, 개최방식, 배석자(의견청취), 의결방식, 심의의견 종합정리 등 심의진행 관련 내용이 부재하나, 기관별 운영규정에는 심의의견 종합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부내용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리해 운영가이드로 작성해 제공 필요. 추후 필요시 법령 개정 유도
-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심의의견 종합정리 관련 안내 필요) 법령 및 기관별 운영규정 상 관련 내용은 부재하나, 심의의견 종합정리는 여러 심의위원들의 의견의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위원 의견 상충 시 특히 필요함. 운영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합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안내 필요
- (운영부서(전담자) 유무와 관계없이 조치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법령 상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지자체 22곳 중 6곳,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13곳 중 단 1곳만이 운영규정 상 조치계획 제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그리고 운영실태조사 결과, 특히 사업부서에서 직접 심의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관련 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운영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기관에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6항을 활용하여 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모색 필요
- (심의위원 제척 기준 현행화 및 개정 필요) 대부분의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위원은 심의 시 제척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건

축심의가 심사대상 업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심사대상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제척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행화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심의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도록 조정 필요

[표 3-3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13곳)	
심의 절차	(내용없음)	-	심의절차 규정 8곳/ 심의기간 규정 7곳	심의절차 규정 8곳 / 심의기 간 규정 5곳	법령에 관련 내용 이 없으므로 기관 별 운영규정 내용 을 살펴본 후 공통 적으로 가이드가 필요한 사항에 대 한 안내 필요
개최 주기	(내용없음)	지자체를 비롯해 일부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대부 분 부정기적으로 개최	대부분 부 정기(사업 부서 요구 혹은 위원 장 필요시)	대부분 부정기 10곳(위원장 필요시, 사업 부서장 요구 시)	-
개최 방식	(내용없음)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 관은 대면회의를 진행 하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서면으로 진행	서면심의 가능 14 곳	서면심의 가능 4곳	국민권익위원회의 견을 반영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을 안내 필요
배석 자 (의견 청취)	(내용없음)	대면회의 진행 시 사업 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일부 기획단계 자문을 수행한 민간전문가 및 기획용역 수행자 등도 배석함	현장조사 가능 17곳 / 의견청 취(관계공 무원 혹은 관계전문 가) 가능 18곳 / 기 술검토 의 뢰 13곳	현장조사 가능 1곳 / 의견청 취(관계직원 (공무원) 혹은 관계전문가) 가능 4곳 / 기 술검토의뢰 1 곳	실효성 있는 심의의 견 제시를 위해 필 요시 현장조사 및 기획수행자, 사업 담당자 등 배석하여 질의응답 가능하도 록 안내 필요
의결 방식	(내용없음)	대부분 원안-조건부-	원안, 조 건부, 재	원안, 조건부, 재심의 10곳	의결방식 및 의결 기준 등에 대해서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13곳)	
		재심의 등 3개로 운영함	심의 18 곳		는 심의자료 및 심 의내용 검토와 함 께 추후 별도 연구 과제를 통해 진행 필요
심의 의견 종합 정리 등	(내용없음)	운영부서가 있거나 총 괄건축가가 위원장인 경우 종합정리에 힘을 쏟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심의의견 종합정 리의 취지에 대해 안내 필요
조치 결과 회신 등 후속 조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가 있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됨 반면 사업담당자가 심 의를 직접 개최 및 운영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는 없음	조치계획 제출 명시 6곳	조치계획 제출 명시는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유일	조치결과 작성 및 회신에 대해 명확 한 안내 필요
모니 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 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모든 기관에 구성 및 운 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을 하고 있지 않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 련 필요
제척· 기피 사유	심의위원이 건축기획 업 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 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 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 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시행령 내용과 상충 심의대상 사업 자문 수행한 경 우 제척· 기피 대상 2곳	시행령 내용과 상충 심의대상 사업 자문 수행한 경 우 제척·기피 대상 2곳	시행령과 상충되 는 내용은 현행화 유도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 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 한 부분 검토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④ 기능 관련 사항

-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심의대상 확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대부분 법령에서 명시한 심의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재원의 유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수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광역-기초 지자체, 위탁-수탁 기관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건축기획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심의대상 설정 기준과 공공건축심의의 운영(주최)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
- (유사한 심의시점, 심의자료로 진행되는 심의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 법령 및 기관별 운영규정 상 관련 내용은 없으나,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건축심의의 기능과 중복되는 절차(시점, 자료 등)로 인식되는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이들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로 개선 필요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 등 자문대상 구체화 필요) 법령에서 명시한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은 22개 지자체 중 16개, 13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중 6개가 포함하여 운영 중이나 보다 세부적인 자문내용은 미비. 기관별 운영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설계공모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으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역할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을 자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정 필요
-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민간전문가 자문기능과 중복 대비 필요) 자문기능은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촉해 운영 중인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와 중복 가능성 있음. 각 제도의 구분 운영 시 혹은 연계 운영 시 장단점을 살펴본 후 최적의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3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법령 내용 및 기관별 운영 실태, 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구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13곳)	
심의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법령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충남의 경우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있는 기초 지자체 사업을, 조달 청, 농어촌 공사 수탁사 업도 심의 가능하도록 확대	법령 내용 동일 충남의 경 우 국비 또 는 도비 지 원이 있는 기초지자 체 사업도 포함	법령 내용 동일 조달청, 농어 촌 공사 수탁 사업 심의 가 능하도록 확대	광역-기초지자체 및 위탁-수탁기관 간 관계정립을 통 한 심의대상 설정 기준 마련 필요
심의 기능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 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 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 원회 등 유사 시점에 유 사한 자료로 심의를 진 행하는 절차들 간의 중 복 인식이 있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필요시 중복되는 절차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이들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개선 필요
자문 대상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법령 내용 동일 (16곳) 설계공모 심사위원 회 구성 10곳 / 설 계공모 심 사 전 법규 및 지침위 반, 공사 비 적정성 등 8곳 / 시공, 평 가, 공사 등 1곳	법령 내용 동일 (6곳)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 구성 0 곳 / 정책, 계획, 제 도, 설계 등 1 곳(국가철도공 단)	‘설계공모 심사위 원회 선정’을 자문 대상으로 명시하 도록 안내 필요
자문 기능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자문을 수행 하고 있지 못함 민간전문가 제도 활용 하는 기관은 민간전문 가가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민간전문가 자문 기능 중복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효율적이고 합리 적인 제도 운영 방 안 마련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Ⅳ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쟁점

■ 운영의 주요 쟁점과 내용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2장), 법령 및 기관별 운영규정 등 제도 현황(3장)을 통해 운영방식 및 주체,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함

[표 4-1] 주요 쟁점(안)

구분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주요 쟁점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13곳)	
운영 방식	독립	●	독립 운영, 일부 일회성 위촉 운영	X	일부기관 타위원회 명단을 활용한 일회성 위촉 운영
	대행	●	대행 운영	X	
	위탁	X	위탁 운영	X	심의대상 확대와 연계해 검토 필요
운영 주체	X	운영부서(전담자) 혹은 관리부서(명단 및 운 영규정 관리)+사업부 서(심의개최·운영)	X	●	일부기관 전담자 없이 관리부서 (명단 및 운영규정 관리) 와 사업부서 (심의개최 및 운영)로 운영
구 성	인원	●	고정인원제 혹은 풀(pool)제 활용	최대인원 제한하는 곳 다수	일부기관 개원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구성)에 제한하지 않는 곳 다수

구분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주요 쟁점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13곳)	
	개요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구 성안 된 채 개의회는 경우 있음	법령 동일	법령 동일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파행
	성별 비율	●	-	일부 양성 평등기본 법 적용	법령 동일	일부 모호한 조문 내용의 자의적 해석으로 기관별 차이 발생
	전문 분야	●	법령 유지 외 분야 축소(도시·조경 제외) 혹은 분야 확대 (전기·통신·소방 등 추가)에 대한 의견	법령 동일 일부 디자 인, 문화, 경관 분야 포함	법령 동일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성 인정한 분야 포함(조달청)	
	임기	●	연임 고려에 따른 임 기 해석 다양	연임 고려 에 따른 임기 해석 다양	연임 고려에 따른 임기 해 석 다양	
영 IFO	심의 절차	X	-	●	●	법령 상 부재한 심의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 기관별 운영규정에 포함해 각각 운영
	개최 주기	X	-	●	●	
	개최 방식	X	-	●	●	
	배석 자	X	-	●	●	
	의결 방식	X	-	●	●	
	심의 의견 종합 정리	X	운영부서가 있거나 총괄건축가가 위원장 인 경우 종합정리 후 사업부서에 전달	X	X	
	조치 결과 회신 등 후속	●	운영부서가 있는 경 우 원활하게 진행. 사업담당자가 직접 심의 개최·운영 시 별 도의 절차 없음	●	내 유일	심의의견 조치결과 회신 등 후속조치와 심의운영 관련 모니터링 내용 미비

구분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운영(실태) 현황 (12곳)	제도(운영규정) 현황		주요 쟁점	
			지자체 (22곳)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13곳)		
	조치					
	모니 터링	●	모든 기관에 모니터 링 하고 있지 않음	X	X	
	제척 ·기피 사유	●	-	법령과 상충	법령과 상충	법령 상 제시된 제척·기피 사유 외 추가로 제시된 내용(심의대상 사업 자문 수행 시 제척·기피 대상)의 자문 및 심의기능 관련 조문 내용과 상충
기 능	심의 대상	●	-	법령 동일 충남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있는 기초지자 체 사업도 포함	법령 동일 조달청, 한국농 어촌 공사 수탁 사업 심의 가능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사업에 대한 심의, 수탁기관의 수탁사업에 대한 심의 등 본래 사업 추진 기관 외 사업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에 대해 적정성 검토 필요
	심의 기능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유사 시점, 유사 자 료로 심의 진행하는 절차들 간의 중복 인 식이 있음	법령 동일	법령 동일	건축기획 단계 유사한 시점에 유사한 자료로 진행되는 절차들 간 중복 인식
	자문 대상 및 기능	●	실질적인 자문 수행 하고 있지 못함. 민간전문가 제도 운 영 기관은 민간전문 가로서 자문 수행	법령 동일 설계공모 심사위원 회 구성 / 설 계 공 모 심사 전 법규 및 지 침위반, 공 사비 적정 성 등 /시공, 평 가, 공사 등 1곳	법령 동일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 구성 내용 없음	민간전문가 자문기능 중복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 비활성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을 자문대상으로 명시하 지 않은 곳 명시하도록 안내 필요

● : 관련 내용 포함 / X : 관련 내용 없음

출처: 연구진 작성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1)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안)

- 2장과 3장에서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 현황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안)을 설정함. 운영방식 및 주체,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각 쟁점별 개선방향은 개선과제 발굴 시 기준이 될 것임

■ 개선방향-1.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

- 운영방식, 운영주체, 인원 등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이 다른 모든 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임
- 일부기관에서 타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심의 개최 시 일회성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것은 본 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 조치 필요
- 또한 운영 실태조사 결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전담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 명단과 운영규정 등만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고 심의 개최 및 운영은 심의대상 사업의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경우에도 건축기획 내실화 및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별 역할 정립 등 가이드 필요
- 인원 등 규모에 있어서도 법령 상 개의기준(재적위원 과반수 구성)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파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정조치 필요
- 법령 상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심의진행 사항은 기관별 운영규정 내용을 살펴본 후 공통적으로 가이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 필요

■ 개선방향-2.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일관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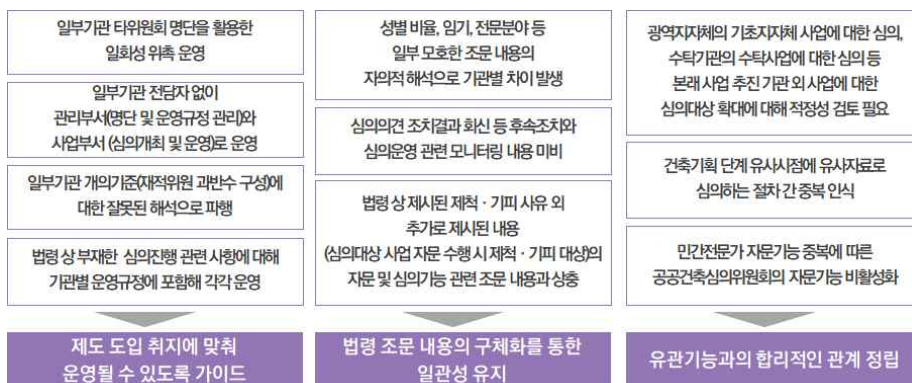
- 성별 비율, 임기 등 법령 상 명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관별 운영규정 내용이 다양함
- 성별 비율은 법령 상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일부 기관의 운영규정은 이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일부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해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함

- 임기는 법령 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연임규정 적용에 따라 총 임기년수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 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할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석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정리 필요
- 전문분야의 경우 법령 상 명시된 분야 외 추가 구성하는 기관이 있어 가능한 것인지 조문 내용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

■ 개선방향-3. 유관기능과의 합리적인 관계 정립 방법 모색

- 심의대상과 관련해 일부 광역지자체가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있는 관할 기초지자체 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수탁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본래 공공건축 사업 추진 기관이 아닌 기관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 필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역할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수행에 있어서도 중복 우려가 있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중복절차 없이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정립 필요
- 연계가 필요한 제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정리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 주무부서와의 협의 진행 필요



[그림 4-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쟁점별 개선방향(안)

출처: 연구진 작성

2) 향후 과제

- 도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앞서 제안한 개선방향에 맞춰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절차를 개선하거나 법령의 세부 조항 개정,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 등 성격과 위계의 차이가 있어 단·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단기 과제

- 단기 과제-1. 기관별 운영규정 개정 유도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한 현행화)
 - (개정령안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심의위원 자격기준, 내부위원 비율, 심의위원 장 외부위원 중 선출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일정을 고려해 변경 내용 반영 필요
 - (심의위원 제척·기피 기준 관련) 일부기관에서 심의대상 사업 자문을 수행한 경우 제척·기피 등 기준으로 삼고 있어 법령 내용과 상충되어 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대상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심의위원 제척 등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건축기획 수행자와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심의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하도록 조정 필요
 -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기관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정 필요
- 단기 과제-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마련
 - (일회성 위촉 운영 지향)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일부 심의대상 사업 발생 시 일회성 위촉 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는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성 및 운영 방향

안내 필요

- (각 주체별 역할 정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부서, 명단 및 운영지침 등 관리부서, 사업부서별 역할 정립을 통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차이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 안내 필요
- (개의회준에 대한 안내) 법령에 명시된 개의회준인 재적위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해석을 통해 파행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법령에 부재한 심의진행 관련 사항 안내) 심의절차, 개최주기, 개최방식, 배석자, 의결방식, 심의의견 종합정리 등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으나 기관별 운영규정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본 후 일관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가이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필요

• 단기 과제-3. 모호한 법령 개정 추진 필요

- (성별 비율 관련) 법령 상 구체적이지 않은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
- (전문분야 범위 설정 관련) 법령 상 명시된 심의위원 전문분야인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 조경 분야 외 구성이 가능함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 시 개정 필요
- (임기) 법령 상 공무원 외 위원 임기를 3년 이내로만 규정하고 연임 관련 사항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화하여 개정 추진

• 단기 과제-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계자 대상 교육 시행 검토

- 운영부서 담당자, 심의위원(장)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계자 대상 교육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추진.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

• 단기과제-5. 심의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위원장 외부위원 중 선출과 관련하여 개정령안 시행 후 모니터링 추진

■ 중장기 과제

• 중장기 과제-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반 마련

-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운영규정 내용 및 운영방식, 운영주체, 구성현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재는 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6항을 근거로 하여 기관에서 운영규정, 운영주체, 구성현황, 심의절차, 심의내용, 심의의견, 조치결과 회신, 심의위원 평가 등 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모색 필요

• 중장기 과제-2.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므로 각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령 상 운영규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 별 특성이 드러나진 않았음
- 향후 각 기관별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 사업의 특성, 연간 사업 건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되,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심의대상을 명확히 정의(수탁-위탁기관 or 광역-기초지자체 관계 고려)해야 하며, 심의자료, 심의절차, 심의내용 및 의결방식, 심의의견 종합정리 및 전달방식,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전문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장) 선출방식 및 구성방식에 대한 구체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 과제-3.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능 역할 정립 방안 마련

- ‘건축기획 업무-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건축기획 단계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각 업무 간의 연계 및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유관 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구상-검증-구체화’라는 의미에서 적정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범 건축기획 단계에서의 체계적 운영전략 수립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독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 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 과제-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내 중복 규정 개선방안 마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기관 중 기(既)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을 활용해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개 위원회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구체적이지 않은 법령 내용으로 공공건축 사업 추진 과정 중 혼돈 우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므로 비단, 건축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중복 규정 내용을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추후에는 공공건축 사업에 특화된 자문 및 심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

실현수단	향후 과제	주체	추진계획
가이드 법령 개정 교육 모니 터링	기관별 운영규정 개정 유도	각기관	단기 과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마련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법령개정필요사항 정리후 주무부서와의 협의추진	aur및국토교통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계자 대상 교육 시행 검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정령안 시행 후 모니터링 추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반 마련	auri	중장기 과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규정 마련 연구	auri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능 역할 정립 방안 연구	auri및협동연구기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내 중복 규정 개선방안 연구	auri	

[그림 4-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추진계획(안)

출처: 연구진 작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연구의 의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첫 번째 실태조사
 - 각 기관 별 운영 및 구성 특성을 분석하고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관에서 수립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내용 분석을 진행
- 특히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모두 운영해야 하므로 각 기관 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인터뷰 시행
 - 기존 건축도시 관련 위원회와 달리 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 사업 단위로 심의를 진행하므로 지자체 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기관 별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 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내용 파악
- 향후 전문적이고 일관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연구의 한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기관 중 일부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후 개선 방향 및 과제 제시
 -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기관 별 운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과제의 기간 등의 제약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
 - 따라서 일부 기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과제 등을 제시해 향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통해 주요 쟁점, 개선방향 및 과제 등을 보완할 필요
 - 또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역할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직접 심의에 참여하거나 심의의결서 및 조치계획서 등을 구득하여 내용 분석 필요

참고문헌

■ 연구 자료

- 권기범, 김상길. (2007). 서울시 건축심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최근 2005~2006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8(2), 65-84.
- 김상호, 이여경. (2015).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예성. (20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방재성, 백선경, 박석환, 김준래. (2021).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 심경미, 이해원, 김민경. (2020).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염철호, 서수정, 이화영, 양은영, 김준래. (2019). 공공건축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창무, 김도년. (2000). 건축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그룹 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9), 143-153.
- 임유경, 변나향, 박석환. (2017).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전영훈, 조성용, 김승범, 신두식. (2016).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 HJP건축사사무소. (2020).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특별시.

■ 보도자료, 뉴스 레터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1.7.). 총괄·공공건축가에게 지역 공공건축 이야기를 듣다:신승수 영주시 총괄건축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Vol.24.
(http://www.pcap.go.kr/_themes/default/upload/newsletter/57/sub01.html(검색일: 2022.1.1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21.10.). 총괄·공공건축가에게 지역 공공건축 이야기를 듣다: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Vol.27.
(http://www.pcap.go.kr/_themes/default/upload/newsletter/60/sub01.html(검색일: 2022.1.1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0.). '21.6월말 기준 공공건축 사업 업무현황 조사 결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1.12.). '21년도 자문에 대한 응답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2010). 권익위, 공공기관 심의의결위원회 사규 일제 정비. 12월2일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7.11.21.).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 공개토론화 자료집.

기획재정부. (2022).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1월 28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미상). 공공건축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안).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 (미상). 건축사업 추진절차.

■ 관계자 심층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6., 법무부 회의실)

서울특별시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2.15.,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신승수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공공건축심의위원 심층인터뷰(2022.2.14., 개별장소 (온라인))

신춘규 청주시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2022.1.25., 청주시청 총괄건축가실)

염철호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 심층인터뷰(2022.01.25., 건축공간연구원 내)
 윤철재 의성군 총괄건축가/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층인터뷰(2022.2.16., 개별장소(온라인))
 조달청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5., 조달청 회의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1.,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6.,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05.12.,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의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4.21., 한국전력공사 회의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심층인터뷰(2022.5.12.,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

■ 법규 등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70호
 「건축기술진흥법」 법률 제17939호
 「건축법」 법률 제1882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호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503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28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41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광주광역시서구훈령 제469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135호
 「부여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729호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1014호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예규 제10호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4927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5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훈령 제1994호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666호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20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840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7814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7호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8835호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01.13.)
구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08.05.)
국가철도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05.14.)
대한체육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규정(20.07.29.)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06.)
서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22.03.1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08.)
시흥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1.07.05.)
아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04.0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21.01.06.)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0.14.)
울산과학기술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21.03.09.)
의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20.04.23.)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1.04.07.)

인천항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지침(20.05.15.)
 청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1.01.08.)
 춘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08.13.)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20.07.)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21.03.01.)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방안(20.06.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요강(20.04.29.)
 한국전력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서(20.03.03.)
 한국폴리텍대학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20.04.2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21.08.)
 홍성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1.03.15.)

■ 웹사이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웹사이트(<http://www.pcap.go.kr/newsletter.cs>)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www.molit.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lis.go.kr/>)
 조달청 웹사이트(<https://www.pps.go.kr/kor/index.do>)

정책자료 2022-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The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지은이 이해원, 방재성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